

연구총서 99-1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와 추진방안

박 영 규
이 교 덕

통 일 연 구 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연구는 냉전 및 냉전종식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그 과정 및 원인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언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구체적 의미와 그것을 위한 과제 및 접근방법의 논리적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개념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의미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및 안정의 확보”이다. 즉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한다는 것은 행위주체들간의 적대성과 불신을 해소하여 평화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냉전구조가 해체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냉전구조 해체’는 그 의미상 냉전이 있도록 하는 외적들의 해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냉전상태에 있게 만드는 여러 요소의 변화나 제거를 통해 구조내 행위자간 갈등과 경쟁적 대립을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한 개념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상의 급격한 변화나 북한체제의 타파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으로는 ‘데탕트’나 ‘평화공존’, 좀더 넓은 의미로서는 ‘평화체제 구축’ 등의 다른 용어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중요하게는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복잡하게 내포된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냉전구조 해체의 5대 과제도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논리적 추론의 산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II.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

1. 국제적 차원의 과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국제적 차원의 과제란 그것에 긍정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조치의 시행을 뜻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양자관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한편, 다자차원에서 상호의존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가. 북·미, 북·일수교

서방세계를 대표하는 미국과 일본이 수교를 통해 북한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면 북한의 대외관계는 다변화할 것이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한과 더 대칭적인 관계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미·일과의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외교적 수단을 중시할 것이다. 북·미, 북·일수교로 외교적 가용자원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그 자원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또한 북·미, 북·일수교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사회의 변화를 야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미, 북·일수교는 양국간의 정치적 관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계재정립을 의미한다. 우선 수교는 양국 사이의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고 자본주의 상품 및 기술이 북한에 침투하는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 관광객의 북한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자본주의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북한 학자 및 학생들의 미·일 유학도 늘어날 것

이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북한 당국이 관리·통제한다 하더라도 자유주의 사조가 북한사회에 전파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상품 및 기술의 침투는 북한 주민의 의식과 일반생활 양태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나. 미·중관계 악화 방지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미·소간의 이데올로기전쟁으로 시작하였으나 한국전쟁에 중국군이 개입함으로써 형성된 미·중간 적대관계로 인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70년대초에 미·중화해가 이루어지고 그후 양국관계는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199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가 선언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양국이 대만문제, 인권, 무역, 핵확산 등의 문제에서 뿌리깊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물론 미·중 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미·중관계의 장래가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안정을 좌우하는 요소인 미·중관계가 악화된다면 역내의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경제발전의 기초도 위협받게 된다. 또한 동북아질서가 미·일 대 중·러 구도로 발전될 경우 북한의 대중·러 군사협력이 증진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남북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우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작업은 어려워질 것이다. 남북한과 함께 미·중의 참여협력이 불가피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작업에서 미·일과 중·러의 대립구도 등장은 치명적 장애가 될 수 있다.

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설립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구축은 기존의 역내 양자간 동맹관계와 함께 이 지역의 새로운 평화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는 국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안보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며 안보관련 분야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간 신뢰구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냉전종식이후 유럽의 새로운 질서 구축과정에서도 유럽의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은 남북한이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남북한이 한반도 군비통제와 평화정착에 합의하였을 때 이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럽에서와는 달리 이질적인 질서와 문화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동북아지역에서 국가간의 안보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지역의 긴장완화 추세와 함께 ‘포괄적 안보’ 개념의 확산 등이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남북관계 차원의 과제

남북관계 차원의 과제란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과 갈등구조를 평화공존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뜻한다. 이는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경제교류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화해·협력과 복한의 개방·개혁 여건 조성, 군비통제,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남북 화해·협력

남북한이 대결과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관행이 쌓아져야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자각할 때에만 관계개선을 전략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한이 상호관계에서 가장 손쉽게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경제협력이다. 경제협력관계가 구축되면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이 제공하는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서 경제자립의 기반을 구축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의 노동력 등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서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야에서부터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협력을 해나간다면 상호간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물질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북지원도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사정도 어렵지만 북한의 경제난에 비추어 민족전체의 번영을 위한 남북간의 책임도 단순히 균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 북한의 개방·개혁 여건 조성

사실 한반도에서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태도 때문이지 냉전구조로 인해 북한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냉전해소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는 내부사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국내적 변화

이고 국제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미·소냉전구조 해체에서도 소련의 국내적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우리 의지대로 유도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변화를 우리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굳이 냉전구조 해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개혁·개방의 여건을 조성해 줄 뿐이며 개혁·개방은 북한 스스로 하는 것이다.

개혁·개방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북한 주민의 의식과 일반생활 양태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개혁·개방은 북한 주민에게 세계정세 인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며,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체제변화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갖게 될 것이다.

다. 한반도 군비통제 실현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억지력 확보를 위한 군비증강이 상대국으로 하여금 안보위협에 빠뜨리고 이번에는 그 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군비증강을 부추겨 상호 끊임없는 군비증강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군비통제는 군사적 위협과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설사 전쟁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군비통제의 목적은 첫째, 전반적인 군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작용·반작용에 의한 군비경쟁을 중지시키며, 둘째,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전쟁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위기시의 안정을 증진하고, 셋째, 상대방의 군사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상호불신과 의혹을 없애며, 넷째, 기습공격의 위협을 제거하고 전쟁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섯째, 우발적 혹은 비의도적인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일차적 목적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여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라면 남북한간 군비통제는 그 핵심적 과제이다.

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반도에서 전쟁이 중지되어 있는 ‘소극적 평화’보다는 남북한이 불신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공존공영을 추구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적극적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작업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다. 즉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북한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고 적대적인 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전쟁을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고 평화공존 속에서 상호 안보와 협력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남북한간의 군사대결 상태를 종식시키고 남북관계를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호관계를 규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규범이나 규칙, 기관, 제도를 설립하려는 것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런데 이처럼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어의적으로 간략히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매우 넓고 복잡하다. 예를 들면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이나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북·미, 북·일수교이고 남북한간 화해·협력의 달성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이고 군비통제이다. 달리 말하면 군비통제와 무관하게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앞서의 여러 과제와 병렬적 위치에 놓

을 수 없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완결적 과제이다.

3. 국내적 차원의 과제

국내차원에서의 과제는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고 용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냉전적 문화를 청산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 냉전문화의 청산

우리 사회에는 남북한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 상호간 이질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정한 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이 문화가 민족간의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냉전문화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증이 원인인 냉전문화는 북한에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탄압을 피해 월남한 집단 사이에서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일반국민들의 의식세계에도 뿌리 내리게 되었다.

남북한이 상호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결의식과 적대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한 주민의 의식 속에 상존하는 불신과 적대감, 대결의식을 씻어내고 같은 동포로서의 유대의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상호 화해와 협력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각자의 생각이 다르거나 상충되는 경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들의 노력

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소기의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수립된 대북정책이어야 그 정당성이 확보되어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된다.

국민적 지지의 창출은 대북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국민여론의 수렴 결과이자 그 표출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는 안된다. 여론에의 영합보다는 여론을 선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홍보방법의 개발과 통일교육의 강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각자가 민족의 성원으로서의 폭넓은 인식과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대북문제에 대해 균형있는 관점을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국민의 대북인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I.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추진방안

1. 추진전략

가. 비대칭적 상호주의

북한에 대해 한·미·일의 제의에 부합하는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제한된 정책선택 범위를 염두에 두면 대칭성의 정상적인 협상유형이 북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서방세계의 비대칭적 우월성은 한·미·일이 비대칭적인 상호주의의 협상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경직된 악순환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

나. 포괄적 접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단순히 안보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여러 사안들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포괄적 접근은 관련사안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정치, 외교, 경제문제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이다.

다. 단계적 접근

남북한은 상호 불신의 정도가 매우 높고 협력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심성있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세부과제를 단기적 선결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한 뒤 상황변수를 고려, 신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라. 국제공조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우리의 독자적 의지로만 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우리는 심정적으로 제3자가 관여하지 않는 가운데 남북한 간의 협상만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이 종식되기를 선호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주변 강대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고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데는 주변 강대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북·미, 북·일관계를 정상화하거나 북한에게 제공할 '당근'을 선정하는 데 미·일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마. 장기적 접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냉전구조의 지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들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불안정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냉전구조 해체의 완성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2. 단계별 추진방안

가. 제1단계: 북한의 정책변화 여건 조성단계

냉전구조 해체의 선행조건은 북한의 정책변화, 즉 북한의 개혁·개방이다. 체제유지에 개혁·개방이 미치는 부작용을 의식하고 있는 북한이 현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안심하고 개혁·개방의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안보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가질 때 개혁·개방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약속받고 경제가 회복 또는 발전할 때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외부와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제1단계의 정책지향점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의 안보불안 해소와 경제발전 등을 통해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대북 농업개발지원 방안을 강구·추진한다. 둘째,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셋째, 북한의 대미·대일관계 개선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주변국에 의한 교차승인이 완료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넷

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함은 물론 대북 포용정책의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대북 포용정책의 상호주의원칙을 융통성있게 적용한다. 여섯째, 북한의 경제상황과 군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이하에서는 기본합의서)의 내용 중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안을 먼저 추진한다.

나. 제2단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단계

제2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목표로 설정한다. 화해부문에서는 기본합의서의 ‘체제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금지’, ‘파괴·전복행위 중지’ 등의 이행을 추진한다. 특히 비방·중상 금지는 양측 정부의 규제가 가능한 관영매체에서 실천한 후, 언론자유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영매체에도 적용한다.

또한 남북관계를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연락사무소의 기능회복이 시급하므로 북한에 대해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를 요구·관철한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경쟁을 지양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하여 남북공관간 협력창구를 개설하며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의 교환 설치를 추진한다.

한편 불가침부문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과 군비축소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군사분과위원회 산하에 자문기구와 주제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는 전문가협의회 및 실무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군사분과위원회와 군사공동위원회의 활동을 제도화시킨다.

군사적 신뢰구축의 기초적 사업으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의 상호 통보를 추진하고 이것이 달성되면 남북 군인사들의 교류,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근역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훈련의 제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규모 및 횟수 제한, 비무장지대내에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 장비 및 병력의 단계적 철수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추진하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다. 제3단계: 평화체제 전환단계

제2단계에서 추진하고 상정되는 남북관계가 수립되면 제3단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자연적으로 개선·발전되어 소요되는 시간의 장단만 있을 뿐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해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제2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제3단계의 목표는 앞 단계에서 추진된 과제들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단계에서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 남북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 확보 및 남북간 군비축소 실현 등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공고화를 목표로 설정한다.

제3단계에서는 우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간 평화상태를 구축하여야 한다. 북한이 한국의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자격을 완강히 거부하여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남북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한·중 평화협정의 동시 체결, 즉 교차 평화협정체결 방안을 고려한다.

또한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이행·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 장치를 마련한다. 미·일·중·러 주변4국이 보장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가 구성될 경우에는 주변4국과 다자안보협의체가 이중으로 보장하는 장

치를 강구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군비축소를 추진하여 남북한 양측의 전쟁도발 능력을 감소 또는 제거한다. 이를 위해 신무기 도입·개발의 제한 또는 금지, 공격용 무기의 우선적 감축 또는 폐기, 대량살상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의 금지, 보유중인 대량살상무기의 전면 폐기, 동수 보유원칙에 의한 군사력 감축, 상호 감시 및 검증체도의 확립 등을 추진한다.

IV. 결론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함에 있어 제일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한의 변화이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는 어렵다. 스스로 만든 기준과 필요에 의한 것이고 속도도 느리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다행히 북한도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서 외부세계로부터 끊임없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속사정이 폐쇄주의를 고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처지를 고려할 때 막다른 궁지로 내몰기보다는 북한이 안심하고 개방과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 여건조성에 있어 미·일의 대북관계 정상화는 필수적이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이다. 이를 통해 화해와 다방면·다차원의 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실천이 용이하고 남북한이 상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야부터 기본합의서의 내용이 지켜지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서 특히 요청되는 것은 국제공조이

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주변국의 호응없이 불가능하므로 다자적이든 쌍무적이든 주변 4강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4강과의 협력 가운데에서도 한·미·일간의 긴밀한 협력은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대북문제에서 한·미·일은 많은 부분 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대북정책의 기초에서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세세한 부분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의 결과에 민감한 국내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미·일 정부로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보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 등 닥친 현안들의 해결이 우선 관심사일 수 있다. 특히 미·일로서는 대북협상에서 단계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인 관계개선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만일 수 있다. 그러므로 미·일에게 포괄적 방식으로 또한 일괄타결의 한 항목으로 대북관계를 개선하라는 촉구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조심성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5
II.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개념	11
1. ‘냉전’과 ‘냉전구조’의 의미	12
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의미	16
III. 한반도 냉전구조의 특성	22
1. 미·소냉전과 침투체제	22
2. 미·소 냉전종식과 한반도 냉전구조의 지속	30
IV.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	45
1. 국제적 차원의 과제	45
2. 남북관계 차원의 과제	51
3. 국내적 차원의 과제	62
V.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추진방안	69
1. 기본방향	69
2. 추진전략	70

3. 단계별 추진방안	74
VI. 결 론	90
참고문헌	94

I. 서론

1. 연구목적

“역사연구의 모든 노력은 시대구분에 귀착한다”고 한다. 시대구분이 역사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의 시대가 앞뒤의 시대와 본질상 다르다고 파악한다는 뜻이다. 역사철학자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90년대를 전후해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¹⁾ 그만큼 그 시기에 세계가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변화된 시대를 ‘탈냉전시대’ 또는 ‘냉전이후시대’(post-cold war period)라 부르고 있다. ‘냉전이후’라는 용어의 사용이 냉전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냉전이 끝나 인류는 다시 냉전이후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으나 한반도만큼은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지 못하다. 냉전 초기에 사회주의진영의 첨병이자 혁명적 기지로서 출발한 북한이 냉전이 끝난 지금도 ‘우리식 사회주의’의 건설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토인비(A. Toynbee)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류역사는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전만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모든 나라가 냉전의 어두운 동굴에서 빠져나간 뒤에도 그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도태되어 버린 공룡의 슬

1)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No. 16 (Summer 1989);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픈 운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간 무한경쟁이 더욱 심화될 21세기의 문턱에 서서, 정부는 1999년 1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언했다. 1998년 하반기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금창리 지하의혹시설 조사를 둘러싼 미·일·북한 간 갈등이 한반도 위기설로 증폭된 바 있는데, 이러한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냉전구조에 연유하고 있다고 인식한 까닭이다.

한반도에서 휴전후 지난 40여 년간 위기가 빈발했음에도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위기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하는데, 이는 남북한의 공동노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양극체제라는 국제체제적 성격이 가지는 힘의 균형과 미·소의 신중한 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

냉전시기 동안 국제사회는 전쟁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한 관계²⁾속에서도 전례없이 ‘긴 평화’를 유지했다.³⁾ 이 기간 동안 미·소는 모든 지역과 쟁점에서 경쟁했지만 지역분쟁이 자신간의 직접충돌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지역분쟁을 억제하고 각각의 피후견국들이 자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⁴⁾ 즉 냉전이 지속되는 동안

2) Adam B. Ullam, *Dangerous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3) J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Elements of Stability in the Postwar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4 (Spring 1986), pp. 99-142; *The Long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냉전시기가 역사적으로 전례없는 평화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는 문헌으로는 J. S. Levy, *War in the Modern Great Power System, 1945-1975*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3); Evan Luard, *War in International Society* (London: I. B. Taurus, 1983) 참조.

4) 미·소가 전쟁을 피하고자 서로 협력하여 지역갈등을 관리한 사례들은 많다. 한 예로 1973년 이집트군을 포위한 이스라엘이 섬멸작전을 개시하기 직전, 소련은 이스라엘에게 작전을 중지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위

미·소는 흔히 ‘적대적 제휴’로 표현되는 관계를 통하여 모든 국제적 사태를 관리했다.

두 개의 초강대국에 의해 지배된 양극체제는 월츠(Kenneth N. Waltz)의 주장처럼⁵⁾ 의사결정시 다수의 독립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다극체제에 비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체제에는 침략시 핵의 사용을 포함한 무한대의 보복이 가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상호억제’가 존재했다. 핵의 위협은 초강대국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낙관적 계산을 훨씬 어렵게 만듦으로써 신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했고 국제적 불안정을 물고울 국내적 요소들이 통제되도록 했다. 결국 국제체제의 안정이라는 목표가 국가 외교정책에서 다른 정책목표들을 압도했다.⁶⁾ 이처럼 냉전기 동안에는 초강대국들도 자유롭지 못했다. 마치 냉전 시기의 국제체제는 “긴 사슬에 일렬로 묶인 죄수들”과도 같았다.⁷⁾

그런데 냉전종식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양극체제가 지닌 속성이 일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수의 지역국가들이 호전적 행위

했으며, 미국도 소련과의 직접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작전 계획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실제로 1972년 미국과 소련은 중동에서 자신들의 행동규칙을 담은 ‘기본원칙합의서’(the Basic Principles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상호관계에서 자제하고 평화적 방법에 의해 이견을 해소하며 협상한다”는 것이었다. William Quandt, *Decade of Decisions: American Policy Toward the Arab-Israeli Conflic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같은 맥락에서 이란과 이라크간 전쟁(1980-88)이 오래 지속된 한 가지 이유로서 미·소가 테헤란 및 바그다드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이 지적되고 있다. Charles Doran,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old War and the Gulf,”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18 (1991), pp. 155-164.

- 5)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 6)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h. 8 and Ch. 9.
- 7) Stanley Hoffmann, *Gulliver's Troubles, or the Sett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McGraw-Hill, 1968), p. 52.

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⁸⁾ 즉 냉전시대에 지역국가들과 각각의 피후견국들을 통제하던 초강대국들의 영향력이 냉전의 해소로 인해 축소되자 미·소의 강력한 통제아래 있던 국가들의 일부는 주변국들에게 좀더 공격적이고 호전적으로 행동했다. 당연히 주변국들은 과거보다 더 안보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⁹⁾에 기인한 군비증강의 확산을 초래했다.

결국 탈냉전이라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는 마·러간 범세계적 갈등이 완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역적 갈등의 해소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탈냉전은 평화나 개별 국가의 안전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냉전종식은 힘과 영향력을 위한 국가간 투쟁의 종언을 뜻하기 보다는 도리어 국제정세에서 비예측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불안정과 폭력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주장¹⁰⁾도 이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 냉전의 해소로 국제정세의 비예측성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기의 평화적 관리는 그만큼 어렵게 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빠지게 됨을 말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롭고 적절한 조치의 강구가 필요하고, 그것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임은 두말할 나위가

8) Mohammed Ayoob, "India as a Regional Hegemon: External Opportunities and Internal Constraints," *International Journal*, Vol. 46 (1991), pp. 420-448.

9) John H. Herz,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2 (1950), pp. 157-180; *Political Realism and Political Ide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Atomic A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pp. 231-243.

10) Samuel P. Huntington, "No Exit: The Errors of Endism," *The National Interest*, No. 17 (Fall 1989), pp. 5-6.

없다.

그렇다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미·소냉전이 종식되었는데도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지속되고 있는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면 우리는 어떤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전개해야 하는가?

마지막 문제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5월 5일 CNN과의 위성회견에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것은 ①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 ②미·일과 북한간 관계개선, 정상화 ③북한의 개방·개혁 여건 조성 ④한반도 군비통제 실현 ⑤정전체제의 남북간 평화체제로의 대체였고, 군비통제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핵심적 과제로 강조했다.

왜 이것들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인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다른 과제들은 없는가?

본 연구는 미·소간 냉전이 종식된 원인 등에 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함으로써 우리의 적절한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구체적 의미와 그것을 위한 과제 및 접근방법의 논리적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를 간단히 말하면 냉전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을 없애는 동시에 냉전종식의 요인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은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존재를 위

협하는 동서냉전이 그 비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종식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사실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냉전의 지속은 관료적, 심리적, 국내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은 물론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성격이 빚어낸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기 어렵다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냉전은 갑작스럽게 끝났고, 이는 거리의 일반인이나 정치가, 언론인, 국제정치학자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국제관계이론가들이 냉전종식을 얼마나 예상하지 못했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월츠는 자신의 저명한 저서를 통해 양극체제의 안정성을 강조했고¹¹⁾ 길핀(Robert Gilpin)은 국제변화가 미국의 압도적 우위에 대한 소련의 도전에서 올 것이라고 예상했으며¹²⁾ 개디스(John Lewis Gaddis)도 2차대전후의 국제체제가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체제와는 달리 “해체될 조짐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¹³⁾ 또한 저비스(Robert Jervis)도 “영토와 영향권에서의 주요 변화는 보통 전쟁이나 전쟁위협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하면서 체제의 평화적 이행 가능성을 부인했다.¹⁴⁾

한편 군비증강과 군비축소에 관한 가설도 현실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현상과 맞지 않았다. 소련이 단행한 일방적인 군비축소는 관료적, 군사적 및 여타 국내적 이익이 군비증강을 조장하고 촉진한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서구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보통 소련에도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가 존

11)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 176-183.

12)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231-244.

13) Gaddis, *The Long Peace*, p. 216.

14) Robert Jervis,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p. 34.

제한한다고 강조했던 학자들은 정반대의 현상을 예상했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관료조직은 느리고 점증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보인다는 견해도 국내외정책에 있어 소련이 보여준 극적인 변화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전체주의체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만 오직 개혁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잘못되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III장에서 논의되겠지만 90년대초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냉전소멸을 예측하지 못한 데 따른 반성과 국제관계이론의 예측력에 대한 불신속에서 냉전해소의 원인에 관한 광범위한 토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설명들이 등장했다.¹⁵⁾

냉전종식에 대해 냉전을 두 초강대국간의 패권쟁탈적 갈등으로 보는 현실주의자와 신현실주의자는 국제체제내에서의 힘(power)의 분포상태와 힘에 의한 국가의 위상에서 나타난 변화가, 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세계적 확산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neoliberal institutionalists)는 70년대의 데탕트와 '시민사회'의 재출현이 주요 원인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학자들은 안보가 상호 공멸의 위험성에 근거하고 있는 시대에서 더 이상 전쟁은 무의미하며 공통의 위험은 공통의 접근방법, 즉 대립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에서 보면, 냉전종식에 대해 국내정치적 역할 등 국가라는 단위체(unit) 수준의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설명보다는 국제체제에서의 힘의 분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체제(system) 수준의 현실주의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다고 한다. 비록 국내적 요인이 소련의 국력을 탕진하는 데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외교·안보정책은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개성이

15) 냉전의 종식과 국제관계이론에 관한 심포지엄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8, No. 2 (1994), pp. 155-277 참조.

나 국내정치적 불안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체제적 요인들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위체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용한 것은 아니다. 국내적 요소들이 소련경제를 후퇴시키고 체제내 힘의 분포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유도한 것도 사실이며, 이 점에서 국내적 요소들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시각은 적어도 국내정치적 변화, 경제적 발전 등의 국내적 요인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옳다. 이 맥락에서 리보우(Richard Ned Lebow)는 “고르바초프정권의 소련 외교정책은 현실주의자들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내정책, 신념체계, 교육의 결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아야만 한다”¹⁶⁾고 주장했다.

국제적 변화를 개별 국가의 국내적 발전과 분리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은 국내적 변화와 소련 대외정책간의 분명한 관계가 다시금 입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냉전의 종식을 이해하는 데 국가의 상호작용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 국가내에서의 사건과 국가를 초월하는 사건의 분석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구의 평화운동, 동유럽의 반체제자들,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 소련 지도자들에 대한 서구 사고방식의 영향, 동유럽의 민족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신뢰성 및 매력 상실 등 현실주의의 틀내에서는 검토될 수 없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냉전종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원칙적으로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16) Richard Ned Lebow, “The long pea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failure of re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8, No. 2 (1994), p. 268.

사물이나 현상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전체 속에서 연구한다는 ‘종합적 접근방법’(synthetic approach)이 타당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종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통일적’(holistic) 개념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그 정반대, 즉 일부의 현상이 좀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덜 연관성이 있거나 결코 관련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과학적 분석의 과제이자 핵심이다. 달리 말하면 과학적 분석은 관련 변수들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된 세세한 요인들을 모두 다 거론하려 들지는 않았다.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된 변수들이 너무 많고 그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면 냉전구조 해체는 분명 분석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대안은 냉전구조 해체를 정책 및 과정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이 개념을 두 가지의 전통적 분석수준, 즉 국제체제수준과 국가수준에 따라 발전시키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국제체제수준에서 냉전구조 해체는 국제체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제체제내에서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생각될 수 있다. 국가수준에서 냉전구조 해체는 정책적 이슈로서 생각될 수 있고 국제체제 전체보다는 개별 국가의 시각에서 분석될 수 있다. 이 분석수준에서는 냉전구조 해체에 접근하는 개별 국가의 정

17) 백중천은 세계적 수준, 동북아 수준, 한반도 수준, 남북한 내부 수준이라는 4개의 분석수준과 군사, 정치외교, 경제, 사회심리의 4가지 쟁점분야를 두 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10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있는 정책적 사항들을 망라한 장점이 있으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백중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방안,”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21세기 한반도 평화공존과 평화체제 구축」 발표 논문, 1999.5.26.

책이 비교될 수 있고 그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이 복합적인 접근방법은 냉전구조 해체의 의미를 분석되는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라는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한다.¹⁸⁾ 국제체제수준에서 분석의 과제는 체제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적절한 요인들을 가려내는 것이다. 국가수준에서의 과제는 대내외정책에서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된 정책이슈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곧 냉전구조 해체를 통해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무엇인지에 주목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냉전구조 해체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 연구는 III장에서 미·소냉전의 원인과 냉전종식의 이유를 국제체제, 국가, 개인이라는 세 가지 분석수준에 따라 조명하고 그것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 설정과 추진방안 수립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IV장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과제를 국제적, 남북관계, 국내적 차원이라는 분석수준에 따라 제시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V장에서 검토 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로 국가수준, 즉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18) 각각의 분석수준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의미를 규정한 것으로서는 허문영,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시론),” 통일연구원 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37-38.

II.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개념

‘냉전구조 해체’라는 용어의 함축적 의미를 학자뿐 아니라 정책결정자, 언론인들이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겨난 부작용의 하나는 그 용어의 개념적 모호성이다.

냉전구조 해체가 개념적 명확성이 없다는 것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 쪽이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 의미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길 위험성이 있다. 북한은 냉전에 대해 “직접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전쟁의 실제적인 준비로서의 적대적인 도전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¹⁹⁾ 이 정의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냉전을 상호작용 현상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라는 일방에 의해 자행되는 것으로 보는 점인데, 이의 논리적 귀결은 결국 냉전의 해소도 갈등 당사자들의 상호 노력이 아닌 제국주의자들의 적대적인 행위의 중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냉전구조 해체’를 주장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대응할 것이다.

개념적 모호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담당자 차원에서 명확한 의미의 규정없이 냉전구조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의 성향에 따라서 ‘냉전구조 해체’가 현상(status-quo)의 적극적인 타파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장에서는 ‘냉전구조 해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선 냉전과 냉전구조의 의미를 살펴본다.

19) 「조선말사전」(서울: 동광출판사, 1990).

1. '냉전'과 '냉전구조'의 의미

'냉전'(Cold War)이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 및 그들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전개된 제한적 대결상태"를 말한다. 냉전은 정치, 경제, 이념, 군사, 선전 등의 영역에서 벌어졌고 무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두 초강대국 사이의 직접적인 무력대결로 악화될 때는 한번도 없었는데, 핵전쟁의 결과를 서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냉전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재정전문가이며 대통령 고문이었던 바루크(Bernard Baruch)가 1947년 의회토론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²⁰⁾

그러나 학자들마다 냉전에 대해서 다소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냉전에 관한 종합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외스테루드(Øyvind Østerud)는 냉전의 5가지 차원을 구분하면서 냉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²¹⁾

첫째, 냉전은 전통적으로 있어온 지배적인 군사강대국간의 경쟁적 갈등이었다. 갈등의 당사자인 미·소는 서로를 의심하고 안보에 대한 상대방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응했다. 1945년 독일과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유럽과 극동에서 힘의 진공상태가 발생했는데, 냉전은 세력권 구축, 새로운 동맹형성으로 이 진공상태를 메꾸려는 경쟁으로서 발전했다.

20)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1990. 그러나 1948년 미국의 평론가 리프먼(Walter Lipmann)이 '냉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견해도 많다.

21) Øyvind Østerud, "Intersystemic Rivalry and International Order: Understanding the End of the Cold War," in Pierre Allan and Kjell Goldmann, eds., *The End of the Cold War*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pp. 13-14.

둘째, 냉전은 두 가지의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체제간의 경쟁이었다. 냉전은 일당제 지배 및 명령경제와 다당제 정치 및 시장경제 사이의 대립이었다. 동서간의 이러한 대립이 이념적 경쟁과 결합하여 다른 어떤 이전의 대립보다도 더 경직된 성격을 띠도록 만들었다.

셋째, 냉전은 초강대국간 군비경쟁이었다. 전후 초기에는 미국이 핵을 독점하고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미사일로 소련을 압도했다. 그러나 1950년대말부터 미국 본토는 소련의 미사일공격에 취약해졌다. 이로써 핵 및 미사일 개발로 대표되는 군비경쟁이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된 한편 군비통제협상이 냉전기간 동안 미·소간 외교의 중심 문제가 되었다.

넷째, 냉전은 동서진영간 제3세계에서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었다. 1950년대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신생국들은 동맹결성, 무기수출, 경제지원 등을 통한 두 진영간 정치적 경쟁의 무대가 되었다. 이 지역에서의 민족해방전쟁과 분쟁에 대한 미·소의 지원여부가 주변부에서의 냉전의 핵심사안이 되었다.

다섯째, 냉전은 초강대국의 국내사정과 연계되어 있었다. 국제적 경쟁은 국내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국내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이익집단이 정치, 군사분야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로 이익을 보았다. 소련에서는 국제환경이 적대적이라는 이유가 엄격한 정치적 규제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고, 미국에서는 특히 동유럽으로부터 이민해 온 집단이 강력한 반소정책을 주창했다.

위와 같이 냉전이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볼 때 ‘한반도 냉전’은 “미·소의 세력권 구축 및 확대 과정의 영향을 받아 남북한간에 전개된 이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제분야에서의 경쟁적 갈등으로서 갈등과 국내정치적 사정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구조란 “일반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상호관계에 의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어 결합된 현상들의 전체”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인간의 신체구조, 식물의 구조, 담론의 구조처럼 전체의 부분들이 조직, 배치되는 양식을 뜻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고 산업구조, 사회의 경제구조처럼 각 부분에 일정한 정합성을 부여하는 한 체계의 부분들의 조직화를 뜻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한다. 구조라는 개념의 핵심적 요소는 복합적 통일체의 내적 연관이자 규제체계라는 점이다. ‘냉전구조’는 ‘산업구조’와 같은 후자의 용례에 속하는데, 이 경우 구조라는 단어가 가진 함의는 냉전을 구성하는 각 요소간에 내적 연관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성립된 통일체로서의 냉전구조가 그것에 속하는 모든 요소를 일정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

구조주의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로 저명한 월츠(Kenneth N. Waltz)가 제시한 구조 개념은 ‘냉전구조’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제공한다. 월츠의 구조(structure) 개념은 구조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으로 국제정치학에서 표준적인 지적 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²²⁾ 월츠는 구조가 단위체(unit)와 단위체 수준(level of unit)에서의 상호작용(interactions)을 만들어내는 선재하는 힘(forces)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작용과 단위체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는 단위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²³⁾

그러나 월츠에게 있어 구조는 이처럼 국가들간의 상호작용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생겨나지만, 일단 성립되고 나면 국가들이 변화시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 결과 구조는 구조

22) Barry Buzan, Charles Jones, and Richard Little, *The Logic of Anarchy: Neorealism to Structural Re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 6.

23)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자체의 영속성과 국가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력을 갖는다.

사실 사회과학에서 구조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구성단위의 행위(action)를 보다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예컨대 사회내의 한 개인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외적인 힘(force), 즉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관계이론에서도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제체제구조, 정부구조, 외교정책결정구조, 지도자의 인식구조 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정해 왔다.

물론 구조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인식론으로서 과학적 실재론(scientific realism)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증적 인식론과는 달리 이 과학적 실재론의 기본 논지는 비가시적인 어떤 대상이 경험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예를 들어 국제정치구조나 냉전구조와 같은 직감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대상도 하나의 실재로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구조’에 관한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가 간취할 수 있는 점은 ‘냉전구조’가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 또는 부분 사이에 일정한 연계적 관련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반면 그 구성 요소에서의 변화 역시 냉전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²⁵⁾

따라서 ‘한반도 냉전’이 “이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제분야에

24) 하영선, “탈근대 국제정치이론,” 이상우, 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서울: 나남, 1992), pp. 150-152.

25) 행위주체는 구조를 전제로 하는 반면 구조는 주체의 행위를 매개로 존재하므로 주체와 구조는 상호 구성하며 상호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조화이론에 대해서는 Alexander E.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 (Summer 1987), pp. 335-370 참조.

서의 남북한간 경쟁적 갈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한반도 냉전구조'는 그러한 제분야에서의 경쟁적 갈등 자체와 그 갈등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이 "상호의존하고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1945년 해방 이후 진영간의 적대적 대결상태가 지속되면서 남북한과 주변 4강 관계가 뒤얽혀서 만들어졌다. 이 냉전구조는 구조의 본질상 서로 연계되어 있고 상호 규정력을 가진 3개의 층위로 나뉘어져 있다. 남북한과 주변 4강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가장 큰 틀의 냉전구조와 한반도 냉전구조의 제1행위자인 남북한이 만들어내는 대립적 상호관계, 그리고 남북한 내부 사회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냉전구조 내의 주요 행위자들은 세계적으로는 사라진 이념적 대립과 그에 따른 정치·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으며 행위자간에는 적대, 상호불신, 동맹, 배척 등이 주요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²⁶⁾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이 세 가지 층위에서의 변화를 수반한다.

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의미

그러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실질적 의미를 검토하기 전에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냉전종식'이 과연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냉전종식'의 의미를 편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냉전이 언제 끝났는지 그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다.

한 견해는 냉전의 기원이 미·소에 의한 유럽분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이 환원된 시점, 즉 1989년으로 규정한다. 즉 소

26) 김달중,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5대 과제," 「통일경제」, 1999년 6월호, p. 4.

련이 동독의 공산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베를린장벽이 1989년 11월 독일군중에 의해 무너졌을 때 냉전은 끝났다는 것이다. 냉전은 “베를린장벽이 해체될 시기가 정해지고 동유럽 국가들의 일부가 확고히 자유선거 시기를 정할 때 종식될 것”²⁷⁾이라는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대표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골드먼(Kjell Goldmann)은 냉전의 본질을 ‘세계적 힘의 투쟁’(global power struggle)과 ‘소련의 동유럽 점령’으로 규정하면서 냉전종식이 “비대칭적 전력감축의 수용, 중부유럽 및 동유럽로부터의 소련 철수, 국제계급투쟁의 포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New Thinking)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⁸⁾

냉전종식의 시점을 비교적 일찍 잡고있는 브레진스키나 골드먼의 경우 냉전종식은 미·소에 의한 독일 또는 유럽의 분할이 종료된 것과 동의어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도 마찬가지이다.²⁹⁾

실제세계에서 냉전종식이 선언된 것은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뒤, 12월 지중해의 몰타섬에서 부시(George Bush)와 고르바초프에 의해서였다. 양국 정상은 이 때 “냉전구조를 넘은 새로운 세계질서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냉전종결 시기에 대해서는 미·소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몰타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냉전이 끝났다”고 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냉전이 끝나가고 있으나 아직 끝났다고는 할 수 없

27) Zbigniew Brzezinski, “Ending the Cold War,”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1989), p. 33.

28) Kjell Goldmann, “Bargaining, Power, Domestic Politics, and Security Dilemmas: Soviet ‘New Thinking’ as Evidence,” in Pierre Allan and Kjell Goldmann, eds., *The End of the Cold War*, pp. 82-103.

29) John J.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1990), p. 195.

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그 후도 “냉전은 끝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 대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태도가 변화된 것은 1991년 9월 무렵이었다. 당시 베이커(James Baker) 미국무장관은 이라크의 쿠웨이트침략에 대해 “냉전종언’후의 최초의 국제위기”로 표현했다. 즉 몰타회담에서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그 사이 격변하는 소련의 움직임을 주시한 때문이었다. 이는 냉전종식의 핵심이 소련의 변화로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³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에버츠(Philip Everts)는 동유럽에서의 평화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와 소련해체가 냉전종식의 핵심임을 주장하고 있다.³¹⁾ 비슷한 관점에서 그룬버그(Isabelle Grunberg)와 리세카펜(Thomas Risse-Kappen)은 냉전종식을 “양극 안보구조의 소멸, 동쪽 진영의 해체, 동유럽국가와 소련을 계승한 국가들의 민주적 정치체제와 맹아적 시장경제로의 이행”으로 규정하고 있다.³²⁾

이처럼 여러 견해들이 있으나 냉전종식을 정의하는 데 있어 소련해체가 핵심이라는 데 꽤 넓은 합의가 존재한다. 사실 소련의 사실상의 항복과 동맹국의 해체가 없었으면 세계의 안보환경이 기본적으로 변화했다고는 할 수 없고,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도 것처럼 급격히 대

30) 나폴레옹전쟁후 승전국들이 서로 협력한 적이 있으나 한, 두 번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체제의 중심에 있는 강대국간에는 항상 적대감이 존재하여 왔다. 소련이 동유럽제국을 포기한다는 것은 강대국의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난 것이었으며, 그래서 실제로 동유럽을 포기할 때까지 소련의 구두 공언은 믿기 어려웠다.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역, 「신미국 안보론(하)」(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2), p. 474

31) Philip P. Everts, “The Events in Eastern Europe and the Crisis in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Pierre Allan and Kjell Goldmann, eds., *The End of the Cold War*, pp. 55-81.

32) Isabelle Grunberg and Thomas Risse-Kappen, “A Time Reckon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 Pierre Allan and Kjell Goldmann, eds., *The End of the Cold War*, pp. 104-146.

결자세를 풀 수 없었다는 점에서 소련해체가 냉전종식을 정의함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는 것은 논박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스타인(Arthur Stein)과 로벨(Steven Lobell)은 냉전종식이 ①한 초강대국의 상대적 붕괴 ②세계적 양극체제의 종말 ③70여년 동안의 이념적 경쟁의 종언 ④최후로 남았던 거대한 다민족 제국의 해체라는 네 가지의 분석적으로 구별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했는데³³⁾, 이 모두는 소련해체와 관련이 깊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한다는 것도 대립하는 갈등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소멸 또는 체제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냉전이 본질적으로 이념적 대립을 내포하는 개념이라면 냉전구조 해체는 이념적 갈등의 해소를 말하는가?³⁴⁾

또한 냉전구조 해체는 목적인가? 수단인가? 어떤 변화에 의해 그 결과로서 달성된 특정의 상태를 말하는가?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의 상태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도기적 단계인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겠다’는 것과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그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한반도에서 냉전이 없어진 상태를 완성하겠다는 뜻이 강한 반면 후자는 냉전이

33) Arthur A. Stein and Steven E. Lobell, "Geostructuralism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e End of Cold War and the Reg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in David A. Lake and Patrick M. Morgan, eds., *Regional Orders: Building Security in a New World*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p. 116.

34) 김경원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냉전은...공산독재체제가 붕괴되어야만 종식된다...역사적 경험은 남북한 사이에도 북한의 공산독재체제가 붕괴되어야만 냉전이 종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한반도에서의 냉전도 남북간의 이념적 갈등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냉전의 종식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냉전이 종식되려면 북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든가 아니면 북한 스스로 공산주의체제를 포기하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1999.9.21.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틀을 없애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비슷한 것으로 ‘경제개혁’, ‘경제구조 개혁’은 유사한 뜻이지만, 후자는 경제활동의 주체,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공간, 환경을 개혁한다는, 이를테면 기구, 제도 등을 개혁한다는 뉘앙스가 짙다. 이처럼 ‘냉전구조 해체’도 구조속의 행위자 자체의 변화보다는 외적 틀의 해체를 의미하는가?

간단히 ‘냉전구조 해체’를 말하지만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면 거기에는 명확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듯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및 안정의 확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한다는 것은 행위주체들간의 적대성과 불신을 해소하여 평화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냉전구조가 해체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³⁵⁾

이러한 인식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제시한 5대 과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먼저 남북한이 화해·협력관계로 전환되는 것은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한 가지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그 방법론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이 강조되었다. 둘째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이 완화가 필요하고 그 해법이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라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 외부세계에 대해서 적대성과 의심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오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정착

35)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다음의 5가지 과제가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이상의 5가지 사안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근본문제로서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CNN과의 위성회견, 1999.5.5.

은 요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이 개방과 변화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여 스스로 문을 열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는 현재의 남북한간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군비통제를 실현해 가는 것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군비통제와 함께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결하고 남북한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전략적 과제라는 것이다.

제시된 5대 과제에서 짐작하듯이 정부가 말하는 ‘냉전구조 해체’는 그 의미상 냉전이 있도록 하는 외적 틀의 해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냉전상태에 있게 만드는 여러 요소의 변화나 제거를 통해 구조내 행위자간 갈등과 경쟁적 대립을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한 개념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상의 급격한 변화나 북한체제의 타파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으로는 ‘데탕트’나 ‘평화공존’, 좀더 넓은 의미로서는 ‘평화체제 구축’ 등의 다른 용어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중요하게는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복잡하게 내포된 의미심장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도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논리적 추론의 산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Ⅲ. 한반도 냉전구조의 특성

1. 미·소냉전과 침투체제

미·소냉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으므로 미·소냉전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립은 미·소냉전의 형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으므로 그 냉전구조의 해체도 미·소냉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냉전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 이미 1950년대초에 시작되어, 서로 대립되는 해석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베트남전의 영향아래 1960년대부터 급속히 성장했다.

냉전의 원인에 대해서 소위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 수정주의자(revisionist), 후기 수정주의자(post-revisionist) 각각은 다른 대답을 제시한다.

우선 파이스(Herbert Feis), 슬레진저(Arthur Schlesinger), 스미스(Gaddis Smith)같은 전통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스탈린과 소련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³⁶⁾ 그들은 2차대전 말기의 미국외교가 수세적이었던 반면, 소련은 공격적이고 팽창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에게

36) Herbert Feis, *From Trust to Terror: The Onset of the Cold War, 1945-50* (New York: Norton, 1970); Gaddis Smith, *American Diplomac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1941-1945* (New York: Wiley, 1965); Arthur M. Schlesinger, Jr., "The Origins of the Cold War," *Foreign Affairs* (October 1967).

있어 미국과 그 동맹국의 정책은 소련 팽창주의에 대한 대응일 뿐이었다.

전통주의자들은 전쟁직후 미국이 유엔을 통한 집단안보를 제안하고 군대를 동원해제한 반면, 소련은 집단안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동유럽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 확대하고자 했음을 증거로서 제시한다. 소련은 2차대전이 끝난 후에도 동유럽에 대규모의 군대를 남겨두었고 1945년 2월 알타에서의 합의와는 달리 폴란드에서의 자유선거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북부 이란으로부터 군대철수를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련은 1948년 공산주의자들이 체코정부를 점령하도록 했고 베를린을 봉쇄했으며, 이윽고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전통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태는 미국으로 하여금 소련 팽창주의 위협을 점차 깨닫게 했고 이로써 냉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특히 1950년대 동안 서구학계를 지배했으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슈스토프(Vladimir Shustov)는 “냉전사에 관한 여러 다양한 접근방법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점에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냉전의 상당한 책임이 “스탈린 및 그의 측근들과 그들의 외교정책에 있다”고 단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도 냉전은 자유의 부인과 독재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³⁷⁾ 따라서 이 견해에서는 냉전이 이데올로기투쟁이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한 수정주의는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초에 크게 주목을 끌었다. 콜코夫妻

37) Vladimir V. Shustov, “A View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and Some Lessons Thereof,” and John Lewis Gaddis, “The Cold War, the Long Peace, and the Future,” *papers presented at the 90th anniversary Nobel Jubilee Symposium*, Oslo, 6-8 December 1991.

(Joyce and Gabriel Kolko), 라피버(Walter Lafeber), 가드너(Lloyd C. Gardner) 같은 수정주의자들은 냉전이 소련의 팽창주의보다는 미국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오히려 소련의 외교정책이 미국의 봉쇄와 반공산주의에 대한 수세적 방어 성격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³⁸⁾ 수정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논거는 2차대전이 종결되었을 때, 미·소간 국력의 차이가 엄청나 진정한 양극체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소련은 3천만의 생명을 잃었고 산업생산이 1939년 수준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복구가 시급했기 때문에 대외팽창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정주의자들은 전후 초기 스탈린의 대외정책이 매우 온건했다고 주장한다. 스탈린은 중국에서 모택동의 공산당이 집권하는 것을 꺼렸고, 그리이스 내전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을 제지하려 노력했으며 헝가리, 체코, 핀란드에서는 비공산정권이 존속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주의는 냉전의 책임을 다같이 미국에 돌린다 하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두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온건 수정주의(soft revisionism)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1945년 4월의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의 사망이 냉전의 발전에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는데, 미국의 정책이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 취임 이후 더 강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트루먼 자신, 그리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국방장관 포레스탈(James Forrestal) 등의 등장도 미국의 반소주의 강화를 설명하는 데 일조한다고 주장한다.

38)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 (New York: Harper, 1972); Walter Lafeber, *America, Russia, and the Cold War 1945-1980*, 4th ed. (New York: Wiley, 1980); Lloyd C. Gardner, *Architects of Illusion: Men and Ideas in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49* (Chicago: Quadrangle, 1970).

한편 강경 수정주의(hard revisionism)는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문제는 개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의 본질에 있었다. 예를 들면, 콜코(Gabriel Kolko)와 윌리엄(William A. William)은 미국경제가 필연적으로 대외적 팽창을 요구하며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적 패권은 독자적인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어떤 국가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지구도처에서 미국이 호전성을 띠게 되는 동기가 될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동맹 체결은 영향력 확대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수정주의는 나중의 다양한 신좌파(New Left) 운동 속에서, 냉전을 대립되는 두 가지 정치, 사회체제간의 경쟁으로서가 아니라 한 가지의 호전적 시스템(one single bellicose system), 즉 나머지 세계를 지배하려는 초강대국간의 연합체제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의 경쟁으로 해석한다.

반면 허링(George C. Herring), 개디스(John Lewis Gaddis) 등 1970년대말과 1980년대의 후기 수정주의자들(post-revisionists)은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³⁹⁾ 명칭에서 시사받듯이 후기 수정주의는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오류가 경험적 자료로 입증됨으로써 편향적 연구를 탈피하고자 한 결과이다. 후기 수정주의 역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비교적 뚜렷한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후기 수정주의 연구의 한 부류는 현실주의의 파라다임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냉전을 무정부 상황하에서의 강대국간 갈등으로 설명한다. 강대국간의 군비경쟁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국제위기는 상호의 안보딜레마로 설명된다. 동서진영이 제각기 유지하는 전략적 태

39) George C. Herring, *Aid to Russia 1941-46*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3); John L.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Oxford: Oxford Univ. Press, 1982). 개디스의 입장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세는 대립적인 이데올로기로 합리화되지만, 이데올로기는 설명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성 요소의 차이 역시 미·소 갈등의 근거로서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다. 그들에 따르면 냉전은 전후 힘의 균형이 양극구조로 이루어진 때문이다. 1939년에는 7개의 주요 강대국이 존재하는 다극체제였으나 2차대전 직후에는 오직 두 초강대국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19세기에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따라서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국은 어떤 형태이든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1917년의 볼셰비키혁명이 갈등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첨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은 戰間期에 심각한 갈등을 피했고 1940년대초에는 동맹국이 되었다. 그러나 2차대전에서 다른 여타 강대국들이 쇠퇴함으로써 힘의 공백이 생겼고 거기에 미국과 소련이 밀려들어서 미·소는 상호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양국이 서로를 불신했으나 그 때는 떨어져 있을 수 있었다. 즉 2차대전 이전에 그들은 서로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45년 이후 미·소는 마주치게 되었고 따라서 유럽은 분할되었으며 1947년 이후 깊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로서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소가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에서 세력균형을 좌우할 수 있는 저울추가 소련의 주변부, 곧 유럽과 일본이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그들은 미·소 모두 팽창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경제결정주의 때문이 아니라 무정부 성격의 국제체제에서의 안보딜레마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소련도 상대방이 유럽을 지배하도록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기 수정주의의 또 다른 부류는 자유주의이론으로부터

연유하는데, 이는 냉전이 정책적 실수,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릇된 역사적 유추로 인한 판단 오류 탓이라고 주장한다.⁴⁰⁾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가진 '적 이미지'가 일련의 불필요한 위기들을 초래하고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냉전은 모든 차원에서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접촉, 상호작용이 있었더라면 애초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 견해에서는 냉전이 체제의 구조적 성격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잘못 때문에 비롯되었다.

사실 이러한 견해는 냉전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분석수준을 채택한 결과였다. 현실주의에 토대를 둔 후기 수정주의자들에 따르면 냉전은 불가피했다. 불가피하다는 것이 “고도로 확률이 높다”(highly probable)는 의미라면 양극구조가 미·소로 하여금 힘의 공백으로 빨려들도록 했고 비개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체제의 구조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설명은 냉전의 일부 측면이 불가피했을지 모르나 냉전의 정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구조에 의한 설명은 미·소간 갈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얼마나 심화될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즉 냉전동안 적대의 정도는 시기마다 달랐고 체제의 양극성은 1989년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에 의한 설명은 상이한 적대 단계나 정도를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구조에 의한 설명 외에 루즈벨트와 트루먼, 스탈린과 후르시초프 같은 개인들이나 국내적 요소가 주목을 받는다. 요컨대 사회적, 개인적 분석수준에서의 연구는 냉전의 심화정도에 대한 설명에 유용하다.

40) 예컨대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예를 들어 사회적 분석수준에서 보면 두 국가는 서로 매우 달랐다. 정치문화도 달랐고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외교정책 결정과정도 상이했다. 따라서 달리 건설되고 다른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지닌 두 사회는 당연히 서로에게 혼란을 주었다. 소련은 마치 '검은 상자'(black box) 같았기 때문에 미국은 냉전동안 소련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미국은 그 상자로 무엇이 들어가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지는 볼 수 있었으나 그 속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소련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미국은 진정한 소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듣기 어려울만큼 뒷잡음이 많이 들리는 녹음 테이프와 같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 따라서 소련은 미국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종종 혼돈에 휩싸였다."⁴¹⁾

한편 한반도는 독일의 경우와 함께 이처럼 여러 차원의 원인이 만들어낸 냉전의 최전선이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미·소 두 초강대국의 세계체제(global system) 내에 성립된 하나의 하위체제였으나 한반도 하위체제는 중동과 같은 다른 지역의 하위체제와는 달리 독립적인 하위체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는 양극의 성격이 분명한 두 초강대국의 '침투체제'(intrusive system)⁴²⁾였다. 한반도가 초강대국의 침투체제로 전화되는 데는 한국전쟁이 결정적이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반도는 동서 냉전체제에 더욱 편입되었다. 패퇴한 일본으로 인해 힘의 진공상태에 빠진 한반도를 분할·점령한 미·소가 한반도에서 각기 자신에 우호적인 단독정권 수립을 완성하면서

41) Joseph S. Nye,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3), p. 112.

42) 침투체제라는 개념에 관해서는 Louis J. Cantori and Steven L. Spiegel,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Regions: A Comparative Approach*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0), p. 259.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두 진영으로 분열되어 대립·경쟁하는 냉전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한국전쟁은 곧바로 동서간의 대리전쟁으로 변질되었다. 전쟁이 종결된 이후, 남북한은 모두 두 초강대국과 강력한 연계를 맺게 되었고 남북한관계도 보다 더 철저한 대결양상으로 변모했다. 예를 들면 남한은 휴전이 성립된 직후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안보를 주한미군에 의존했으며, 북한 역시 1961년에 중·소와 각각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안전에 관한 한, 두 공산대국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후 1965년에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자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립적인 삼각관계가 출현하게 되었다. 즉 서울·동경·워싱턴을 연결하는 전략적 축과 평양·북경·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또 다른 전략적 축이 서로 대립·대결하는 양극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내의 대결구조는 주변 4강과 결합하여 한층 더 복잡한 국제적, 지역적 대결구조로 변화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의 분단구조도 더욱 더 경직된 양태를 보였다. 요컨대 한반도 하위체제는 국제체제와 중복 또는 융합되어 있었다.

한반도에서 냉전이 고착되는 데 이러한 국제체제적 원인이 일차적으로 작용했다면 자유주의이론에 근거한 후기 수정주의의 입장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남북한의 정책적 오류,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불신과 전쟁의 경험에 기인한 지나친 피해의식에서 온 잘못된 판단 등이다. 상대방에 대해 가진 '적 이미지'가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위기들을 초래하고 심화시켰다. 제5공화국에서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된 평화의 댐 건설 운동은 정권안보적 고려의 작용여부와 상관없이 한동안 우리 사회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반복 대결의식을 조장해 냉전의 심화에 일조했다. 따라서 냉전체제의 구조적 성격보다는 인간의 오류에 기인한다는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냉전의 해소에 중요한 것은 냉전 당사자간의 더 빈번한 상호 접촉과 의사소통이다. 여기서 상호작용을 방해한 국내적 요소로서 지적되는 것은 남북한 집권자들의 개성이나 군부의 정치적 개입, 정책 결정과정, 문화적 성격 등이다. 예를 들면 남북한 모두에서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조장된 상대방에 대한 극렬한 적개심이 냉전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했다. 북한정권은 상징조작을 통해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극대화시켰으며 이를 정권유지 및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즉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감, 배타적 민족의식의 고취 등을 통해 모든 주민을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냉전상황을 김일성 우상화에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가장 확일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회문화를 구축한 것이다. 남한내에서도 계속된 군부의 정치적 개입과 역할증대가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다원주의를 약화시킴으로써 냉전의 완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관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2. 미·소 냉전종식과 한반도 냉전구조의 지속

한반도 냉전의 국제체제적 요인이었던 미·소냉전은 해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냉전체제의 철저한 침투체제였던 한반도에서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한반도 냉전의 요인과는 달리 미·소냉전을 종식시킨 특별한 요인이 있는가?

가. 미·소 냉전종식의 원인

냉전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자연히 냉전종식의 원인에 대

한 설명에서도 상이한 견해로 귀결된다. 냉전이 본질적으로 강대국간의 끊임없는 힘(power)의 경쟁의 또 다른 형태였다는 견해에서는 소련 국력의 쇠퇴가 냉전종식의 핵심원인이다. 이상주의적 전통에 따라 인간의 잘못을 강조하는 견해에서는 군비경쟁과 위기의 학습경험, 그리고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에 의해 계발된 통찰력이 주요원인이다. 냉전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팽창과 제국주의의 결과라는 견해에서는 사회주의가 그 우월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 서구의 메카니즘 때문에 냉전이 종식되었다.

그런데 소련의 쇠퇴가 냉전종식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수용할 경우에도 소련의 쇠퇴가 왜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냉전종식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주장은 봉쇄가 유효했다는 것이다. 케넌(George Kennan)은 2차대전 직후 미국이 소련으로 하여금 팽창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다면 소련은 이데올로기 전파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점차 소련 공산주의는 연약해져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괄적인 전망에서는 어느 정도 케넌이 옳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설명의 결함으로 지적되는 것은 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왜 1989년에 냉전이 끝났는가? 왜 냉전은 40년이나 계속되었나? 바꾸어 말하면 왜 냉전은 10년간 더 지속되지 않았나? 봉쇄가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으로는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된다.

또 다른 설명은 '제국적 과대팽창'(imperial overstretch)이다. 역사가 케네디(Paul Kennedy)는 제국은 내부의 힘을 소진할 때까지 과대팽창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에 미국이 방위와 외교에 경제의 6%를 투입한 것에 비해 소련은 경제의 1/4 이상을 쏟아부을 정도로 과대팽창했다. 그런데 케네디는 역사상 과대팽창한 어떤 다민족 제국도

강대국간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약화될 때까지 스스로 퇴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⁴³⁾ 그러나 소련은 강대국간 전쟁에서 패배하지도 약화되지도 않았으나 스스로 퇴각했다.

세 번째 설명은 1980년대의 미국의 군비증강이 냉전에서 소련으로 하여금 굴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히 소련과 경쟁하려는 미국정부에 맞서 소련은 1985년 이후 협상태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⁴⁴⁾ 그러나 이 다소 영웅적인 해석도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비판의 대부분은 미국이 소련에 대해 것처럼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었고, 설사 미국이 그랬다 하더라도 소련이 굴복하여 개혁으로 대응해야 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⁴⁵⁾ 더욱이 레이건의 정책이 공산주의의 쇠퇴를 가속화하기는커녕, 실제 그 쇠퇴의 속도를 늦추었다는 주장도 있다.⁴⁶⁾ 따라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의 정책이 소련으로 하여금 제국적으로 과대팽창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었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된다. 이 주장은 결국 이전 시기의 미

43)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Random House, 1987).

44) 레이건의 봉쇄정책이 직접적으로 공산주의의 붕괴를 유도했다는 주장은 다음의 문헌에서 발견된다. Anthony R. Dolan, *Undoing the Evil Empire: How Reagan Won the Cold War* (Washington, 1990); Jeffrey Herf, *War by Other Means: Soviet Power, West German Resistance, and the Battle of the Euromissiles* (New York, 1991); Patrick Glynn, *Closing Pandora's Box: Arms Control and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1992).

45) Matthew Evangelista, "Sources of Moderation in Soviet Security Policy," in Philip Tetlock, et al., *Behaviour, Society and Nuclear War*, 2 (New York, 1991), pp. 255-354.

46) Michael McGwire, *Perestroika and Soviet National Security Policy* (Washington, 1991).

국의 준비증강은 그러한 영향이 없었다는 것과 같은데, 이는 동트기 전 자신의 울음이 해가 떠오르도록 했다고 생각하는 수탉과 비슷하다는 것이다.⁴⁷⁾

이러한 갖가지의 비판 때문에 냉전종식을 촉발(precipitating), 매개(intermediate), 심화(deep)라는 세 가지 타입의 원인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냉전종식의 가장 중요한 촉발 원인은 한 개인, 즉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였다.⁴⁸⁾ 그는 공산주의의 대체가 아니라 개혁을 원했다.⁴⁹⁾ 그러나 개혁은 위로부터 통제되기보다는 오히려 아래로부터 추동되는 혁명으로 변질했다. 국내외정책에서 고르바초프는 기존의 소련 쇠퇴를 가속화하고 냉전종식의 속도를 높이는 많은 조치들을 시행했다. 국내에서 그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를 통해 소련 해체의 발단을 제공했다. ‘신사고’로 불린 고르바초프의 외교정책 역시 냉전종식에 기여했다.

고르바초프의 외교정책은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공동안보(commom security) 개념인데, 여기서는 안보를 위해 공동체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르바초프와 그의 측근들은 상호의존이 증가하는 세계에서 안보는 비영합게임(non zero-sum game)이고 모두가 협력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는 가능한 한 많은 핵무기를 제조하려 하기보다는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를 보유하는 전

47) Nye,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p. 116.

48) 냉전종식에서 고르바초프가 한 역할에 대해서는 Peter Shearman, “Gorbachev and the End of the Cold War,” *Millennium*, Vol. 26, No. 1 (1997), pp. 125-135.

49)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혁명이 아니라 체제의 특정한 개선이었고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슬 회했다. Mikhail Gorbachev, *Memoirs* (London: Doubleday, 1996), p. 185.

략을 선택했고 팽창주의는 모든 측면에서 이익보다는 부담이 더 많다고 생각한 것이다. 동유럽에서 소련이 위성제국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은 반면 이득은 너무 적으며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희생이 많은 재난으로 평가했다.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인접국가에 공산주의체제를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따라서 1989년 여름까지 동유럽에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 그 결과 헝가리는 동독인들이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동독인들의 탈출은 동독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 동독정부는 더 이상 시위를 진압할 기력이 없었고 소련의 후원도 얻지 못했다. 결국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

물론 이런 사태들은 고르바초프의 오산에서 발생했다. 그는 공산주의가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개혁을 위해 그것에 조그만 구멍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구멍을 통해 댐속에 갇혀있던 압력이 분출되기 시작하자 압력들은 급속히 출구를 확대했고 곧 체제를 산산히 찢어버렸다.⁵⁰⁾

이는 여전히 의문을 남긴다. 왜 1989년인가? 왜 고르바초프하에서 발생했나? 어느 정도 고르바초프는 역사의 우연이었다. 1980년대초, 연이어 사망한 3명의 늙은 소련 최고지도자가 있었다. 1985년이 되어 서야 후르시초프하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 이른바 '56년 세대'가 정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공산당 정치국원들이 1985년 고르바초프의 경쟁자 가운데 강경노선의 다른 인물을 선택했다라면 기울어가는 소련이 10년을 더 지탱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처럼 급속히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은 냉전종식의 시기(timing)를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50) Nye,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pp. 117-118.

매개(intermediate) 원인은 케넌과 케네디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 이념과 제국적 과대팽창이었다. 고르바초프가 채택한 개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신사고’는 ‘56년 세대’에 의해 수용된 서구의 이념이었다. 국경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과 접촉의 성장은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에 기여했고 서구의 경제적 발전은 그들에게 또 다른 매력이 되었다. 제국적 과대팽창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중한 국방예산 지출이 소련사회의 다른 부문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선진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소련에서 보건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사망률이 증가했다. 결국 군부마저 과대팽창에 따르는 막대한 부담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 이념과 제국적 과대팽창이라는 매개 원인이 중요하긴 하나, 냉전종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심화 원인도 검토해야 한다. 심화 원인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퇴조와 소련 경제의 실패이다. 1945년 직후 공산주의는 널리 인기가 있었다.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이 유럽에서 파시즘 저항운동을 이끌었고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미래의 물결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련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얻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1956년 스탈린의 범죄를 폭로한 탈스탈린화, 1956년 헝가리와 1968년 체코, 1981년 폴란드에서 자행된 탄압, 국경을 초월한 자유주의 이념의 전파에 의해 점차 줄어들었다.

또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소련 중앙계획경제체제의 무능으로 소련경제가 후퇴했다. 스탈린은 중공업과 ‘굴뚝산업’을 강조하는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를 만들었는데, 이는 탄력성이 없었다. 성장하는 서비스산업에 대처하지 못했고, 20세기말 3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적 변화로 평가되는 정보의 역할 성장에도 적응하지 못했다. 고르바초프가 1985년 집권했을 때, 미국에는 3천만대의 개인 컴퓨터가 있었으나 소련에는 불과 5만대 뿐이었다. 4년 뒤, 미국에는 4천만대가 있

었음에 비해 소련에는 고작 40만대가 있었다. 시장지향적 경제와 민주주의는 1930년대의 ‘굴뚝 시기’에 스탈린이 만든 소련의 중앙집권적 체제보다 기술적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더욱 탄력성이 있음을 입증했다. 한 소련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1980년대말까지 소련산업의 오직 8%만이 세계기준에서 경쟁력이 있었다. 92%의 산업이 기준이 하인 한, 소련이 초강대국으로 남아있기는 어려웠다.⁵¹⁾

따라서 유럽에서의 냉전은 소련체제의 위기에 의해 종식되었다. 중앙집권적 명령경제는 후진 농업사회에서의 초기 산업화의 역동성이 소진되고 자원의 격렬한 착취로 성장의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정체에 빠졌다.⁵²⁾ 이처럼 공산주의모델은 국내에서 비효율적이었을 뿐 아니라 발전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도 더 이상 매력이 되지 못했다. 소련은 1980년대 초반에 몇몇 피후진국가들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힘의 균형은 동쪽진영에 불리하도록 움직였다. 소련제국의 변두리인 동유럽은 비용면에서 부담이 된 반면, 서구경제는 마르크스주의가 인정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응력과 경쟁력이 있었다.⁵³⁾ 냉전의 해소는 이러한 말기의 위기가 외적으로 표현된 결과였다.

이상에서 본 미·소냉전의 해소 원인을 단순히 한반도 상황에 대입한다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제일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체제 자체의 변화이든 정책적 변화이든 북한의 변화이다. 소련의 변화가 미·소냉전의 해소에 결정적이

51) Nye,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p. 119.

52) Daniel Deudney and G. John Ikenberry, “Soviet Reform and the End of the Cold War: Explaining Large-Scale Historical Chang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7, No. 3 (1991), pp. 225-250.

53) Fred Halliday, “The End of the Cold War,” *New Left Review*, 180 (1990).

있듯이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냉전구조 해체의 단초가 마련될 수 없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북한이 심대한 변화를 보이려면 고르바초프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나 개혁파의 출현이 필요하다. 고르바초프의 '56세대'가 정권의 중심축을 형성하기까지는 30여년이 걸렸고 자신에게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김정일의 공언에 비추어 요원한 일이지만 북한에서도 개혁을 원하는 정치적 엘리트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정책결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를 주도할 정치적 집단의 등장 이외에 변화의 매개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북한에 대한 서구의 자유주의 사조, 민주주의 이념의 전파와 그에 따른 주체사상의 퇴조이다. 북한에서 개혁파가 출현하고 북한주민들이 반정부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깨닫고 부분적으로나마 개방과 민주주의, 실용주의 등의 서구이념을 수용한 존재일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폐쇄성 속에서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것은 외부사정에 관한 지식을 통해 얻는 상대적 빈곤감과 서구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동경이다. 국경을 초월한 정보유통과 접촉의 성장은 이러한 요소의 확산에 기여한다.

'제국적 과대팽창'이 소련사회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과다한 군비지출과 그에 따른 경제실패 역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중앙계획경제체제 자체의 약점에 덧붙여 북한의 엄청난 국방예산 지출이 경제를 후퇴시키고 국력을 탕진하여 사회의 다른 부문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⁵⁴⁾ 중요한 것은 군부마저 핵 및 미사일개발

54) 황장엽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계속 군비증강에 국력을 탕진하여 경제를 더욱 파탄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대북 경제체제 완화 및 경제원조에 반대하고 있다.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서울: 시대정

등 군비의 과잉지출에 따르는 막대한 폐해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 요인들은 미·소냉전의 해소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정확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다. 달리 말해서 어찌면 특수성이 개재되어 있을 미·소냉전의 종식과정과 요인을 냉전해소의 과정과 원인에 관한 일반론으로 확대해 버림으로써 북한의 변화 또는 한반도 냉전해소의 개별성을 경시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미·소간 국제냉전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로 인해 더욱 현실성있는 것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나. 한반도 냉전구조의 지속

냉전의 초기에 두 가지의 냉전 요인, 즉 양극구조의 국제체제와 미·소간의 격렬한 이념적 경쟁이 지역적·국지적, 심지어 국내적 분쟁들을 국제화했고 결국 냉전은 지구 전체를 휩쓸게 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에서의 국지분쟁이 동서경쟁으로 빨려 들어갔다. 초강대국은 각각 같은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지역국가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자신들에게 구체적인 이익이 없거나 역사적 유대가 없는 지역에까지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세계화된 절정기에서조차 지역적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 유럽, 중동, 아시아는 초강대국에 의해 고도로 침투되고 초기단계에서 냉전으로 끌려 들어갔으나, 아프리카와 남미의 많은 지역은 냉전시기의 대부분 동안 초강대국간 경쟁의 변두리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올바른 방법, 속도,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냉전의 보편적 특성과 함께 지역적 차이에 따른 한반도 냉전구조의 독특성이나 한반도 정세의 상황적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냉전이 지속되는 동안 아시아의 국제관계도 지역적 성격을 잃고 세계화되었다. 지리적으로 가장 먼 국가인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한 일본은 지역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자율성을 잃어 버렸고 중국은 주변의 비공산국가로부터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냉전에 의해 중국과 소련이라는 전통적 시장과 천연자원 공급원으로부터 차단된 동아시아의 비공산 국가들은 미국시장에 고도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냉전은 뚜렷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공산세계와 자유세계간의 분리가 유럽에서와는 달리 지역적 관계를 완전하게 지배하지는 못한 점이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다. 첫째, 공산정권 수립과정상의 차별성이다. 동유럽의 공산정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시 대체로 소련 점령정책의 피조물로 탄생했다. 소련의 지정학적 안보이익에 봉사하도록 설립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구의 공산정권들은 소련이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능력과 의도를 고수하는 한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반면 아시아의 공산정권,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공산정권들은 국내 역학의 산물이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각국의 국내적 상황 때문이었다. 모택동이나 호지명은 소련의 덕택으로 집권한 것이 아니었다. 모택동은 오히려 스탈린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권력투쟁에서 성공했다.

한편 북한은 정권탄생시에 동유럽적인 측면과 아시아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는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모택동처럼 혁명의 성공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소련점령군에 의해 권좌에 올랐다. 그러나 김일성은 중·소분쟁 속에서 공산세계의 단결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중·소간의 갈등을 이용함으로써 북한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김일성은 자신의 정권에 대한 외부세력, 특히 소련의 압력을 줄일 수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친소파나 친중파 등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여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⁵⁵⁾

둘째, 소련의 위협이 유럽국가들에게는 심각했지만 아시아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이다. 제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세력균형체제가 두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체제로 대체되었는데, 이 양극체제의 성격은 매우 분명했고 위협의식도 선명했다. 소련의 위협에 대한 공통적 관심이 북대서양동맹(NATO)의 단결을 유지시켜 주었다. 따라서 소련 위협의 소멸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극적이었다. 반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위협은 소련이라는 외부에서 오기보다는 지역국가 내부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⁵⁶⁾ 더욱이 두 공산주의 대국인 중국과 소련간의 동맹은 불과 10년간 지속되다 1960년에 해체되고 말았다. 중·소분쟁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련이 중국에 핵개발능력을 제공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일어났다.⁵⁷⁾ 북한과 베트남은 이 중·소분쟁을 이용했다.

55) 강성학, 「카멜레온과 시지프스」(서울: 나남출판, 1995), pp. 246-247.

56) Miles Kahler, "Institution-Building in the Pacific," in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 eds., *Pacific Cooperation: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London: Allen & Unwin, 1994), p. 119.

57) Susan L. Shirk, "Asia-Pacific Regional Security: Balance of Power or Concert of Powers?" in David A. Lake and Patrick M. Morgan, eds.,

셋째, 유럽에서는 미국이 다자주의를 통해 영국과 프랑스를 끌어들이므로써 소련에 대한 대항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간에 힘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는 연합능력을 향상시키기는커녕 부담만을 증가시킬 뿐이었다.⁵⁸⁾

이러한 요인 때문에 아시아지역에서는 공산진영이나 자유진영이나 응집력이 강한 진영으로 견고화되지 못했다. 특히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그리고 남미나 아프리카에 비해서조차도 아시아지역은 안보문제에서 지역적 협력을 위한 틀을 갖지 못했다. 군비통제에 관한 지역적 합의도 없었고 불가침이나 무력불사용과 같은 규칙에 관한 합의도 발전시키지 못했다.⁵⁹⁾

결론적으로 아시아에서는 냉전시기에도 양극체제의 구조적 성격이 유럽처럼 분명하지는 않았다. 국제체제 차원에서는 분명히 양극체제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으나, 지역적 체제의 차원에서 힘은 보다 분산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소가 유지했고 유지하고 있는 동맹관계들은 각각 다자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양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소련이 동유럽에서 만들어 놓았던 외부제국(external empire)을 아시아 공산동맹국들간에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소련의 해체, 곧 냉전종식이 미치는 영향은 과거 소련의 영향력이 컸던 지역일수록 그만큼 크고, 그렇지 못한

Regional Orders, p. 254.

- 58) Miles Kahler, "Institution-Building in the Pacific," in Andrew Mack and Johnson Ravenhill, eds., *Pacific Cooperation: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London: Allen & Unwin, 1994), p. 20.
- 59) Robert A. Scalapino, "Introduction," in Robert Scalapino, Seizaburo Sato, Jusuf Wanandi, and Sung-joo Han, eds., *Asian Security Issues: Regional and Global*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p. 1.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소련이 초강대국의 지위로부터 탈락한 것은 동서간 대결이 첨예했던 유럽에는 극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소련의 영향력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아시아에는 유럽에서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는 베를린장벽의 붕괴나 동구 공산정권의 몰락과 같은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시아가 지닌 이러한 전반적인 특성에 덧붙여 동북아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4강간의 치열한 경쟁과 견제도 한반도 냉전구조가 특수성을 지니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탈냉전시대이지만 동북아에서는 열강들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의 핵심적 과제는 이 지역에서 적대적인 패권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⁶⁰⁾ 미국은 중국이 적대적 패권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논리도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계속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겠지만 중국이 미국주도의 지역질서에 순응만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안보정책도 구소련 또는 러시아에 의한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것에서 중국-대만 갈등, 한반도 급변사태 등 주변사태에 의한 안보위협에의 대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1997년 9월 '미·일 방위협력 신지침'을 채택하고,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역할의 범위와 기능을 확대했다. 반면에 중국은 장기적으로 힘의 전방투사전략을 채택하여 국력의 수평적 팽창을 시도하고 있다.⁶¹⁾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역내 위상강화 노력과 이를 억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견제, 그리고 잃어버린 영향

60) 미국 국익위원회, "미국의 국익," 「국가전략」, 제3권 제2호 (1997년 가을/겨울), p. 310.

61) 백중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방안," p. 15.

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교차하면서 동북아정세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작업은 4강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만큼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과 한반도가 모두 미·소냉전체제의 침투체제였으나 유럽의 경우는 냉전시대에서도 미·소간에 행위규칙이 정립되어 일정한 부문에서 협력이 이루어졌고 미·소에 도전할 만한 세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하위체제인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한반도문제를 놓고 미·소간에 구체적인 양해나 협력이 없었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도전세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냉전의 일차적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교류와 협력이 전혀 없었다.

특히 남북한 사이에는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협력이 아닌 갈등이 상호관계를 지배했다. 남북으로 분단되기 이전에 이미 항일독립세력은 상해임시정부 수립 후 좌·우로 분열되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고 해방 이후에도 건국문제와 신탁통치안 수용 등을 둘러싼 좌·우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민족 내부의 갈등은 북한사회를 소비에트화하려는 소련과 반공주의를 지향하는 남한의 미군정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고 동서냉전의 영향 속에서 나타난 남북한 단독정권 수립은 정치세력간, 계층간 적대감과 불신을 심화시켰다.

민족 내부의 반목과 대립을 돌이킬 수 없이 고착화시킨 것은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경험이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한간에 교류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 적대적 갈등과 불신의 늪은 깊어졌으며 분단의 장벽은 한층 더 두터워졌다.

한국전쟁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위협을 내면화시켜 철저한 '민족분단'의 원인이 되었으며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위기

적 상황을 조성했다. 남북한관계가 기형적으로 장기간 동안 전쟁행위의 일시적 중지라는 휴전체제하에 놓이게 된 것도 한국전쟁 탓이며, 이 때문에 휴전성립 이래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을 배치하고 계속 군비경쟁을 통해 상대방의 위협을 상쇄하려는 안보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추구의 한 가지 결과는 군사적 위기와 긴장의 영속화였고, 이는 또다시 남북한간 적대적 불신을 깊게하고 대결구조를 더욱 경직화시켰다.

더욱이 북한이 동독의 붕괴를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그에 따른 국제적 냉전질서의 해체가 결코 체제보전에 이롭지 못하다는 교훈을 얻은 것도 남북한 관계개선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이 '먹고 먹히우는 통일'을 반대하며 동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 남한에 대한 폐쇄와 경계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IV.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키는 작업은 냉전을 지속시키고 있는 국내외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 냉전의 등장과 심화는 과정(process)이었다. 따라서 그 종결도 단일의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냉전구조 속의 일차적 행위자인 국가간 상호관계의 성격을 바꾸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실제적인 정치적, 경제적 조치를 통해 남북한관계를 힘에 의한 경쟁에서 협력과 동반자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는 냉전의 필요에 기여했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번성한 냉전문화의 청산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가 요구된다.

1. 국제적 차원의 과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국제적 차원의 과제란 그것에 긍정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조치의 시행을 뜻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양자관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한편, 다차원에서 상호의존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가. 북·미, 북·일수교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게 되면 남북한은 동북아의 모든 국

가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설사 미·일이 북한과 정식으로 수교하지 않더라도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대북교류와 접촉을 확대하는 등 수교에 버금가는 대북관계 개선을 이룬다면 사실상 4강에 의한 교차승인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의 교차승인이 실현되면 이는 동북아정세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동북아 4강은 점차 한반도정책에서 남북한을 대등하게 상대하는 두 개의 한국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사실 탈냉전시대에 들면서 한·중수교 및 한·러수교, 북·러조약의 폐기, 미·일의 대북접근, 남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정경분리 원칙 적용 등으로 4강의 두 개의 한국정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이들 4강은 남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냉전시대에 형성된 이념적 진영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지 않았을 뿐이다. 이는 한·미 동맹조약과 북·중 동맹조약이 냉전시대에 맺어진 혈맹적 관계를 단절할 수 없도록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방세계를 대표하는 미국과 일본이 수교를 통해 북한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면 북한의 대외관계는 다변화할 것이고 4강을 비롯한 모든 국가는 각자 국익에 따라 두 개의 한국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와 유혹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4강의 정책은 남북한을 더욱 자기의존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새 차원의 관계설정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은 상대를 평가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전과는 달리 동맹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교차승인 전까지는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는 한국이 남북관계에서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나, 교차승인이 완성되면 북한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한과 더 대칭적인 관계에 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관계, 특히 동북아 4강과의 관계에 적극성을 보

일 것이다. 남한이 미·일과의 소위 ‘남방 3각관계’를 잘 유지해 왔음에 비해 ‘북방 3각관계’는 일찍 와해되었으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서라도 북한은 미·일과의 관계증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소원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로 만회하려 하고 남한을 배제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차승인 이후에도 세계무대에서는 남한이 계속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라도 최소한 동북아의 정치·외교적 4강관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한이 대칭적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미·일과의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외교적 수단을 중시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미, 북·일수교로 외교적 가용자원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그 자원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⁶²⁾

또한 북·미, 북·일수교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사회의 변화를 야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미, 북·일수교는 양국간의 정치적 관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계재정립을 의미한다. 우선 수교는 양국 사이의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고 자본주의 상품 및 기술이 북한에 침투하는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 관광객의 북한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자본주의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북한 학자 및 학생들의 미·일 유학도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북한 당국이 관리·통제한다 하더라도 자유주의 사조가 북한사회에 전파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상품 및 기술의 침투는 북한 주민의 의식과 일반생활 양태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62) 최중철, “교차승인 완성후 한국의 안보정책,” 『국방논집』, 제32호(1995년 겨울), p. 97.

나. 미·중관계 악화 방지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미·소간의 이데올로기전쟁으로 시작하였으나 한국전쟁에 중국군이 개입함으로써 형성된 미·중간 적대관계로 인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70년대초에 미·중화해가 이루어지고 그후 양국관계는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199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가 선언되기에 이르렀다. 동반자관계 발전 방향은 경제분야 보다는 핵확산금지 등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고 최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결정으로 양국간의 경제적 협력도 크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국이 대만문제, 인권, 무역, 핵확산 등의 문제에서 뿌리깊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물론 미·중 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미·중관계의 장래가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1997년에 미국방부가 2001년까지의 군사력 운용방향 등을 담아 발표한 「국방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는 적어도 오는 2001년까지는 미국에 필적할 만한 강국이 출현하지 않아 미국이 지배적인 초강국으로 남을 것이나, "2015년까지 1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의 이익에 군사적으로 도전할 야망과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급속한 경제개발을 토대로 군사력 증강을 시도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1996년 일본과 「신안보공동선언」으로 동맹체제를 강화했다. 주일미군의 항모 「인디펜더스」호와 「니밋츠」호의 航跡을 보면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미

군은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와 공동연습을 하고 있다.⁶³⁾

이러한 미·일의 행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60년대 이후 오랜 반목의 관계를 청산하고 경제 및 안보면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⁶⁴⁾ 1998년 중·러는 총리 정례회담과 군사지도자 교환방문 및 정상간의 비공식 회담 등을 통해 1996년에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21세기까지 지속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과 러시아간에 정치·안보적 관계 증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미국 주도에 의한 신국제질서 형성을 반대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이북 중국총리 방러시 중·러는 「공동성명서」에서 이라크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무력행사 의도를 견제했다. 세르기에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러 군사지도자들은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조성하여 지역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일에 의한 전역미사일방위체계(TMD)구축을 반대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999년 12월 9일 북경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회담에서도 “국제사회의 일이 한 국가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중·러의 입장이 명확히 천명되었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관계의 다극화’를 지향하여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중·러는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위체계 구축 및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공동전선 모색과 양국의 경험을 확대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30년간 분쟁을 겪어온 영토문제를 해결했

63) 「朝日新聞」, 1997. 4. 18.

64) Gilbert Rozman, “A Regional Approach to Northeast Asia,” *Orbis*(Winter 1995), p. 67.

다.65) 따라서 중·러접근이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결집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동아시아의 안정을 좌우하는 요소인 미·중관계가 악화된다면 역내의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경제발전의 기초도 위협받게 된다. 또한 동북아질서가 미·일 대 중·러 구도로 발전될 경우 북한의 대중·러 군사협력이 증진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남북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우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작업은 어려워질 것이다. 남북한과 함께 미·중의 참여·협력이 불가피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작업에서 미·일과 중·러의 대립구도 등장은 치명적 장애가 될 수 있다.66)

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설립

현재 동북아질서는 탈냉전적 변화와 냉전적 구조가 공존하는 이중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에서의 미·러간 군사적 대립국면 해소, 북한의 대미·일 접촉 증대 등은 역내에서의 긴장완화 추세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질서의 다극화와 역내 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심화도 지역안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지역에는 미·일·중·러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있고 한반도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등 냉전적 대립요인이 잔

65) 「조선일보」, 1999. 12.10.

66) 이 점을 강조하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로서 미·중간, 미·북간,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일평,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중국·미국의 역할,” 통일연구원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Ⅱ)」(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34-58.

존하고 있다. 또한 영토분쟁과 최근 급격히 부상되고 있는 환경문제 등도 동북아 안보환경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질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지역에서 아직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북아질서의 특징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구축은 기존의 역내 양자간 동맹관계와 함께 이 지역의 새로운 평화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는 국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안보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며 안보관련 분야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간 신뢰구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냉전종식 이후 유럽의 새로운 질서 구축과정에서도 유럽의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은 남북한이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남북한이 한반도 군비통제와 평화정착에 합의하였을 때 이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럽에서와는 달리 이질적인 질서와 문화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동북아지역에서 국가간의 안보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동북아지역에서의 긴장완화 추세와 함께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개념의 확산 등은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남북관계 차원의 과제

남북관계 차원의 과제란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과 갈등구조를 평화공존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뜻한다. 이는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경제교류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화해·협력과 북한 의 개방·개혁 여건 조성, 군비통제,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남북 화해·협력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냉전적 대결구조 속에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상호불신을 키워 왔으며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큰 이익을 보지 않도록 경계해 왔다. 남북한이 상호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러한 대결의식과 적대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한 주민의 의식 속에 상존하는 불신과 적대감, 대결의식을 씻어내고 같은 동포로서의 유대의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상호 화해와 협력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장기간에 걸쳐 적대관계를 유지·심화시켜 온 국가간에 긴장을 점차적으로 완화하여 협상을 촉진시키도록 고안된 전략이 「긴장완화의 누진적 상호주의」(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GRIT)전략⁶⁷⁾이다. 이 전략은 자국과 상대방 국가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협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상호신뢰의 증진이 중요함을 강조

67) Charles Osgood, "Suggestions for winning the real war with communis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December 1959), pp. 295-325; C. Osgood, *Alternatives to War or Surrender*(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pp. 85-134; Svenn Lindskold, "Trust Development, the GRIT Proposal and the Effect of Conciliatory Acts on Conflict and Cooper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85, No. 4(July 1978), pp. 772-793.

하고 있다.⁶⁸⁾ 물론 신뢰의 조성이 바로 협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GRIT전략을 구사하는 국가뿐 아니라 상대방 국가도 긍정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⁶⁹⁾ 즉 상대방 국가가 GRIT전략을 구사하는 국가와 함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이 대결과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관행이 쌓아져야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자각할 때에만 관계개선을 전략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에게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북한이 상호관계에서 가장 손쉽게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경제협력이다. 현재 산업구조와 부존자원,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남북한은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다. 경제발전 단계로 보면 남한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성숙단계를 지나 조정단계에 접어들어 오래전부터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이 추진된 반면 북한에서는 경공업분야의 육성이 요망되며 중공업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설비가 필요한 상태이다.

경제협력관계가 구축되면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이 제공하는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서 경제자립의 기반을 구축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68) 이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Deborah W. Larson, "Crisis Prevention and the Austrian State Trea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1(Winter 1987), pp. 27-60 참조.

69) Alexander Georg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in A. George,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and Lesson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703.

북한의 노동력 등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은 국제경제관계에서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국제정치적으로도 남북관계를 통일을 향한 특수관계로 인정하게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⁷⁰⁾ 이 때문에 「남북 기본합의서」도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위해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제로섬(zero-sum)적인 성격이 강한 안보문제와는 달리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의 증대와 남북한 경제의 상호 의존도의 심화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완화하여 남북간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적대적 상호의존’ 성격을 띤 남북관계가 순전히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안보논리로 해결될 수도 없음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것이다.

남북경협이 북한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도움이 될뿐 정작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이나 남북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정권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시켜 북한체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대남 적 개심을 완화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경협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야에서부터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협력을 해나간다면 상호간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물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70) 박순성,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방안,” 민족통일연구원, 「남북 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81, 86.

그리고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북지원도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사정도 어렵지만 북한의 경제난에 비추어 민족전체의 번영을 위한 남북간의 책임도 단순히 균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을 대상으로 형평의 원칙,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에 따르는 우리의 희생도 대응적 견지에서 기꺼이 수용할 것이 요구된다.

나. 북한의 개방·개혁 여건 조성

사실 한반도에서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태도 때문이지 냉전구조로 인해 북한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냉전해소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는 내부사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국내적 변화이고 국제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미·소냉전구조 해체에서도 소련의 국내적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우리 의지대로 유도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변화를 우리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굳이 냉전구조 해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개혁·개방의 여건을 조성해 줄 뿐이며 개혁·개방은 북한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개혁·개방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필요한가? 달리 말하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필요한 북한의 변화가 어떻게 개혁·개방을 통해 올 수 있는가?

개혁·개방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북한 주민의 의식과 일상생활 양태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개혁·개방은 북한 주민에게 세계정세 인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며,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체제변화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갖게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체제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경우는 역설적이지만 북한 정권의 지배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매일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이는 경제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시기일텐데, 그 성공은 종래의 동원경제가 경제문제의 해결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거나 경제개방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개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화가 불가피한데, 자유화와 근대화는 장기적으로 부의 성장에 따른 빈부의 격차, 사회의 분화와 다원화, 개인의 자율성 성장 등의 시민사회적 요소를 반드시 등장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성숙은 사회가 국가와는 다른 독자적 영역에서 변화의 대안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에서 반정부성격의 사회세력이 등장하여 철저한 정보정치와 중첩된 통제구조를 피해 대중운동을 조직화하고 전개할만한 단계에 이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세력의 등장은 적어도 수년간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어 다수의 주민이 북한 사회와 외부세계와의 차이를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즉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도전은 그들이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을 절감할 때 발생한다.⁷¹⁾ 박탈감이나 빈곤감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갖게 되는 절대

71) Ted Gurr,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III장 참조; 이른바 'J-curve 이론'을 제시한 데이비스는 상대적으로 삶의 조건이 좋아지다가 급강하하는 상황이 오히려 삶의 조건이 계속 급강하하는 상태보다도 집단혁명 발발의 확률이 높다고 한다. James C. Davi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XX

적인 박탈감이나 빈곤감은 체제로부터의 도피를 유도할 뿐이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현상은 이러한 절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의 탈출구를 찾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민봉기, 혁명이 가장 가능한 상황은 현재의 북한과 같은 절대적 박탈감이나 빈곤의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어느 정도 생활이 나아졌으나 다른 사람들, 특히 남한 동포들이나 중국 인민보다는 형편없이 가난하고 삶이 고통스럽다고 집단적으로 의식할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은 체제도전의 충분조건에 불과하다. 체제도전을 위한 필요조건은 바로 북한 지도자들의 허구성을 북한 주민들의 인식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카리스마적 정통성을 가져 북한 주민들의 절대적 숭배대상이었으나 김정일은 상징조작에 의해 우상화되었을 뿐 아직 북한 주민들이 인정할 만한 정책적 성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김정일은 정책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면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도 김정일은 유화책을 쓰거나 경제를 더욱 빨리 희생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빠른 시일안에 경제를 희생시키기 위해서는 더 폭넓은 개방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이번에는 체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마냥 현상유지를 고집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가 조직화되기 전에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길은 더 많은 정책변화를 하는 것뿐이다. 이 정책변화는 반드시 상당한 범주의 개방정책을 포함할 것이다. 북한이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보다 철저한 통제에 성공한다면 체제

는 한 동안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안정이 될 수는 없다. 경제성장과 사회적 변화는 주민의 자율성 욕구를 필연적으로 자극하여, 결국 북한체제의 경직성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은 일원주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즉 작은 변화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체제변화를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동유럽에서 정치변동이 갑자기 이루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⁷²⁾

만약 북한의 지도자들이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체제 내에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일 것이다.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제내에 작은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주의체제 속성 중의 하나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엘리트들의 경쟁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동의에 의한 지배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결국 점진적 변화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제를 개방하여 어느 정도 동의를 확보하고 정치적으로는 더욱 더 통제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 방법은 잠정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이 꾸준히 지속되는 한,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체제에의 위협요소는 정보유입에 의한 사회로부터의 반발이다.⁷³⁾

요컨대 북한체제의 변화 誘因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조건의 향상과 외부세계에 관한 주민들의 지식 공유인데, 개혁·개방은 이 유인의 성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72) 민족통일연구원 편,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98~321.

73) 조기숙, “북한체제 변동 전망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모델,” 통일원 편, 「북한·통일연구 논문집(III)」, (서울: 통일원, 1993), p. 308.

또한 김정일의 정통성은 김일성이 의거했던 전통적 및 카리스마적 정통성이 아니라 점차 사회·경제적 업적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정통성(rational legitimacy)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합리적 정통성의 확보에는 경제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발전에는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이며 융통성을 갖춘 전문 기술관료(technocrat)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록 이념적·체제적 이유에서 충성심과 당성에 토대한 전문가의 중용이 우선될 것이지만 개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개방지향적 전문가의 등용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개방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다. 결국 개혁·개방으로 인한 자본주의적 경제요소의 침투와 거둬드는 정책적 시행착오의 결과, 북한 정권내에서는 개방의 정도와 내용을 둘러싼 권력엘리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전문기술관료를 주축으로 한 개혁파의 등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북한의 심대한 정책변화 또는 체제변화의 서곡이 될 것이다.

다. 한반도 군비통제 실현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일반적인 방법은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자위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이 자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듦으로써 빚어지는 결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소위 '안보딜레마'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즉 단순히 자위를 위한 군사력 증강이 상대국으로 하여금 안보위협에 빠뜨리고 이번에는 그 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군비증강을 부추겨 상

호 끊임없는 군비증강의 악순환을 거듭하게끔 하는 것이다. 지나친 군비증강은 자원의 낭비 및 긴장과 불신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군비통제는 군사적 위협과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설사 전쟁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군비통제의 목적은 첫째, 전반적인 군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작용·반작용에 의한 군비경쟁을 중지시키며, 둘째,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전쟁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위기시의 안정을 증진하고, 셋째, 상대방의 군사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상호불신과 의혹을 없애며, 넷째, 기습공격의 위협을 제거하고 전쟁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섯째, 우발적 혹은 비의도적인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⁷⁴⁾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일차적 목적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여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라면 남북한간 군비통제는 그 핵심적 과제이다.

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양극체제 속에서 어느 한 극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안보를 보장 받던 냉전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한 극이 사라져 버려 불확실성이 증대된 탈냉전시대에서 과거의 방법은 더 이상 국가의 안보를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군비경쟁에서 논의했듯이 자위를 위한 군사력

74) 전성훈, 「군비통제 검증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4.

증강에의 의존은 대안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끝없는 한반도 군비경쟁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무한경쟁에서 낙오되게끔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더욱이 북한이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한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남북한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지 못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억지력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자포자기적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중지되어 있는 '소극적 평화'보다는 남북한이 불신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공존공영을 추구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적극적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작업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다. 즉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북한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고 적대적인 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전쟁을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고 평화공존속에서 상호 안보와 협력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제도화란 국제관계이론상의 레짐(regime)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레짐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기관이나 합의된 원칙, 규범, 절차, 규칙을 뜻한다.⁷⁵⁾

레짐이라는 개념은 국가간의 경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간 또는 조직간에 합의한 규칙과 규율을 이행하도록 상호 감시하고 격려하는 절차를 고안하거나 기관을 설치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유럽에서의 신뢰구축 조치 및 재래식 무기감축 조치에 대한 감시레짐은 유럽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남북한간의 군사대결 상태를 종식시

75) Joseph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 (Summer 1987), p. 391.

키고 남북관계를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호관계를 규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규범이나 규칙, 기관, 제도를 설립하려는 것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런데 이처럼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어의적으로 간략히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매우 넓고 복잡하다. 예를 들면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이나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북·미, 북·일수교이고 남북한간 화해·협력의 달성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이고 군비통제이다. 달리 말하면 군비통제와 무관하게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앞서 논의된 여러 과제의 해결에서 진전이 없는 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앞서의 여러 과제와 병렬적 위치에 놓을 수 없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완결적 과제이다.

3. 국내적 차원의 과제

국내차원에서의 과제는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고 용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냉전적 문화를 청산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 냉전문화의 청산

우리 사회에는 남북한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 상호간 이질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정한 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이 문화가 민족간의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냉전문화이다. 북한정권

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증이 원인인 냉전문화는 북한에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는데 과정에서 탄압을 피해 월남한 집단 사이에서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일반국민들의 의식세계에도 뿌리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반복의식은 반공 이외에 별다른 통치이념을 찾지 못했던 남한의 역대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장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⁷⁶⁾

첫째, 권위주의체제와 권위주의적 문화가 배태되고 육성되는 토양을 제공했다. 해방직후 외세의존적인 권위주의적 정권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도 본질상 성격이 비슷한 역대 정권이 계속될 뿐 아니라 그것을 강화시켜 준 것은 분단에서 오는 대립의식이었다. 즉 북한에 대한 철저한 대결의식이 우리 사회내 통합을 이룩하는 강한 구심력과 정권생존을 보장해 주는 카리스마의 생성 및 존속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분단과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게 된 남한정권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웠으나 실제로는 '반공'에서 정통성의 근거를 찾으려 했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대대로 반공이념이 국가목표의 최우선순위로 강조되어 왔으며 그 결과 반공이 모든 영역에서의 국민생활을 지배하고 감정적 차원의 무조건적인 반공정치문화를 형성, 심화시켜 왔다.

둘째, 군사문화의 확산에 기여했다. 분단과 그에 따른 냉전문화는 이념의 강경화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군부의 개입과 역할증대를 가져왔다. 군사적 대결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적대적 대립 및 갈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조직논리를 가진 군부가 사회의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통합의 결정적 일원으로 등장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치문화

76)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연구,"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상)」(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67-69.

적 측면에서도 군의 정치적 개입 확대는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지속과 문화의 획일화 현상을 초래했다.

셋째, 다원주의가 약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냉전문화는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표방하고 그것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내에서 다양한 이념과 다원적 정치집단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사회내 여러 집단간 갈등의 첨예화는 의식의 양극화 현상 및 흑백논리의 횡행을 초래하여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고 건전한 중간과 '집단이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형성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억제하였다.

넷째, 남북한간 대립과 냉전문화는 민족주의의 왜곡화 현상을 낳았다. 본래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간의 대등성에 바탕을 두고 민족 구성원 사이의 통합과 전통에 토대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간 분단과 거기에 기생한 냉전문화는 적대적 대립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민족국가를 이룩하여야 할 당면과제로서의 민족주의 본연의 기능은 사라지고 정권에 정당성과 존재논리를 부여해 주는 이념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냉전문화를 청산하여야 한다.

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

북한과의 냉전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단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우리로서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 관심은 당위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역사관이나 현실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 각각이기 마련이다.

북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한편에서는 화해와 관용의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태도와 호전성을 이유로 강경정책을 요구한다. 이 문제는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직접 체험한 기성세대와 그렇지 못한 젊은세대 사이의 시각 차이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에의 첫 걸음이란 국내적으로는 이같은 각양각색의 견해를 가능한 한 좁혀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각자의 생각이 다르거나 상충되는 경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들의 노력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소기의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수립된 대북정책이어야 그 정당성이 확보되어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정책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민 각자가 가지는 문제의식이나 시각이 서로 다른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특정한 문제에 대해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이루어내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하고 자율적인 이익집단이 분화되어 통일문제에 관해 여러 이해집단의 공통분모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통일 및 대북문제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정당·단체들이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기반위에서 통일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민간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옴으로써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와의 협의창구를 마련한 것인데, 그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설립의 일차적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적 지지의 창출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다. 국민적 지지의 창출은 대북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며, 북한의 제안이나 동향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신속성보다는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단계적 절차를 거칠 때 가능하다. 즉 국민적 지지는 민주적 절차와 가치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가치의 존중이란 개개인에게 대북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실에서는 대북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비공식 조직을 통한 대북접촉 배제로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대북정책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 추진되기 위해서는 비공식 기구 및 인물의 대북접촉과 정책에의 관여가 지양되어야 한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대북정책이 ‘여론수렴’보다는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했다.⁷⁷⁾

그러나 국민적 지지 창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가 민족의 성원으로서의 폭넓은 인식과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대북문제에 대해 균형있는 관점을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관

77) 「민족통일연구원」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통일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994년과 1995년의 경우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대답이 28.3%와 35.1%로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어진다”는 대답 20.9%와 20.0%보다 많았다.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05;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77.

련된 문제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국민의 대북 인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6년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응답자의 57.2%가 “북한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66.1%가 “모르는 편”이라고 응답했는데⁷⁸⁾, 이러한 관심도와 지식간의 심한 불균형이 대북정책에 대한 오해와 무용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북한관련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존재하는 제약의 완화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개방과 활성화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이처럼 대북정책이 국민여론의 수렴 결과이자 그 표출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는 안된다.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론에의 영합보다는 여론을 선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홍보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홍보에 있어서는 정책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의 동질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조국에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⁷⁹⁾통일교육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단순히 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던 과거의 통일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양식을 익힐 수 있도록 토론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⁸⁰⁾

78) 공보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서울: 공보처, 1996), p. 332.

79) 통일원, 「통일교육 기본방향」(서울: 통일원, 1995), p. 4.

80) 민족통일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서

물론 이와 같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적대적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국내적 반향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국민적 지지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노력은 대북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V.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추진방안

1. 기본방향

지금까지 논의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의미, 과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무엇보다도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에는 사회주의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북한이 남한을 비롯하여 외부세계에 대해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차원에서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궁극적으로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

첫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란 남북한의 상호 인정에서부터 출발하여 공존을 도모하며,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제도적·실질적 차원에서의 평화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북한체제 자체의 변혁을 지향해서는 안된다. 체제 자체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대화조차 하지 말자는 것으로 북한에 받아들여질 것이다.⁸¹⁾

둘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일차적으로 남북간 평화공존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남북간 평화적 공존은 북한의 체제변화를 전제로 하는 연방단계로의 진입 이전에 달성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의 연방단계(1민족, 1국가, 1체제, 1연방정부,

81) 이종석, “대북 포용정책의 평가와 전망,” p. 22.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1999년 추계학술세미나, 「‘국민의 정부’에 대한 중간국정 평가」 발표논문. 1999.9.17.

2지역자치정부)에서는 남북 합의에 의해 마련된 연방헌법에 기초하여 연방대통령과 연방의회가 구성되고, 남북한은 UN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에 단일 국가로 가입함은 물론 세계 각국과의 국교도 단일화된다. 뿐만 아니라, 군대통합까지도 전제된다.⁸²⁾ 이는 사실상 통일 단계에 진입한 것을 의미하고 남북한체제의 동질화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남북한체제의 동질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추진전략

가. 비대칭적 상호주의

국제적인 냉전체제와 현재의 한반도 냉전간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전자가 미·소간의 핵 평준화와 균형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이었다면 후자는 서방세계가 비대칭적 우월성을 지니는 전략적 관계라는 점이다. 이는 매우 한정된 정책선택권을 지닌 북한에 비해 서방의 선택권이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포용정책은 이러한 선택권의 유연한 활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해 한·미·일의 제의에 부합하는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제한된 정책선택 범위를 염두에 두면 대칭성의 정상적인 협상유형이 북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방세계의 비대칭적 우월

82)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1995), pp.42~43. 이와 관련, 북한은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곧바로 연방제로 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

성은 한·미·일이 비대칭적인 상호주의의 협상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경직된 악순환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

나. 포괄적 접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단순히 안보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과제로 지적된 북·미, 북·일관계 개선, 군비통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도 개별적으로 독립된 문제가 아닌 서로 연관된 것이다.

더욱이 현재 북한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보면, 갈등주체간의 대립이 비대칭적 목적을 지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은 이에 대칭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체제유지가 보장된다면 경제적 보상을 전제로 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같은 쟁점에 대해서 갈등주체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문제 해결의 전망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이 경우 현안들을 단일 분야로 국한시켜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요구를 광역적으로 고려하여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문제를 개별 쟁점별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⁸³⁾

원래 포괄적 접근이란 여러 사안들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경우 관련사안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83) 김달중,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5대 과제,” p. 5.

그것을 단순히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정치, 외교, 경제문제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이다.

다. 단계적 접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국제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국내적 차원 모두에서의 변화를 지향한다. 그러나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동시적으로, 같은 정도로 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힘들다. 세 가지 차원의 변화에 선후가 있을 수 있고 차원마다 변화정도가 다른 불균형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⁸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남북한이 군사적 갈등과 대결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한은 상호 불신의 정도가 매우 높고 협력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심성있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세부과제를 단기적 선결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한 뒤 상황변수를 고려, 신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제1단계에서 곧바로 제3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신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정책도 반드시 해당단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계에서도 추진하는 등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⁸⁵⁾ 이는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이 단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84) 박종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미국·남북한의 3각구도와 한국의 정책대안,” 통일연구원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Ⅲ)」(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8.

85) 허문영,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 p. 53.

북한이 현시점에서 원하는 것은 체제동요를 유발할 수 있는 한·미·일의 제안들을 거부하면서 외화를 획득 또는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다. 수사적으로는 대미, 대일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 가서는 수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북한이 체제 유지가 불안한 현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국교수교를 서두르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대미관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수교에 앞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의 과제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국제공조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해서는 크게 보면 상호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비록 냉전구조와 분단이 주로 외제적 힘에 의하여 주어졌지만 그 극복은 외세의 간섭없이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주'이자 '민족자결'을 뜻하는 신성한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비로소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적 차원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면 무엇보다도 「남북 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대북문제에서 미국정부가 협상을 주도하면 한국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탈피하는 것이 냉전구조 해체 노력에 있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우리의 독자적 의지로만 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한반도 문제는 그 해결방향이 남북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어느 지역보다

민감히 교호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 그 실현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냉전의 극복도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는 심정적으로 제3자가 관여하지 않는 가운데 남북한간의 협상만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이 종식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주변 강대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지 않고 남북 당사자만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애초부터 한반도 문제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고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데는 주변 강대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북·미, 북·일관계를 정상화하거나 북한에게 제공할 '당근'을 선정하는 데 미·일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마. 장기적 접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냉전구조의 지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들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불안정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냉전구조 해체의 완성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3. 단계별 추진방안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방안들은 이미 많은 학자와 전문가

들에 의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망라되었다.⁸⁶⁾ 뿐만 아니라 과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논의 또는 제시되었던 방안들도 실질적으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세세한 방안들을 다시 거론하지 않고, 앞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우리가 주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조치들을 북한의 수용가능성, 현실적 합리성, 객관적 타당성, 남북관계개선 기여도 등을 중시하여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냉전구조 해체 작업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 모습은 초기단계의 과제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당면의 전략과제는 냉전구조 해체의 실마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즉 여건조성단계에서 추진과제를 실행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과제의 실현 가능성에서 보면 국제적 차원의 과제는 우리가 권유할 수 있을 뿐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반면 국내적 차원의 과제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지만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효과면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북·미, 북·일관계 개선은 미·일의 자유의지가 크게

86) 이에 관한 것으로는 통일연구원이 1999년도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4차례의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있다. 이외에도 백종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방안」; 김계동,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국제적 탈냉전의 유형과 선택적 대안」, 한국전쟁연구회·한국 언론재단 주최, 「한국전쟁의 회고와 과제: 새 천년의 의미」에서의 발표논문, 1999. 6. 25.;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주최 제40회 학술회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과 남·북한 관계전망: 『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 Second Look," July 27, 1999; Ralph A. Cossa, "Peace on the Peninsula: How to Get There From Here," a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n "Future Strategic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For Secur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held by New Asia Research Institute, Okazaki Institute and Pacific Forum CSIS at Sheraton Walker Hill, Seoul, Korea, April 22-23, 1999 등 참조.

작용하는 과제이며 냉전문화 청산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는 목표달성에 있어 보조적인 효과만을 가진 것으로서 그 자체의 성공이 목표달성을 좌우하는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초기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북한의 호응이 중요하지만 과제추진의 성공 여부가 비교적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을 뿐 아니라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효과도 상대적으로 큰 남북관계 차원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가. 제1단계: 북한의 정책변화 여건 조성단계

냉전구조 해체의 선행조건은 북한의 정책변화, 즉 북한의 개혁·개방이다. 체제유지에 개혁·개방이 미치는 부작용을 의식하고 있는 북한이 현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안심하고 개혁·개방의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안보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가질 때 개혁·개방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약속받고 경제가 회복 또는 발전할 때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외부와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제1단계의 정책지향점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의 안보 불안 해소와 경제발전 등을 통해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안보 불안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비롯한 외교의 다변화이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우리의 정책적 수단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단계에서는 북·미, 북·일간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추가 해제, 일본의 대북 배상금 지급, 식량 및

비료 등 한·일의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이 활성화와 북한의 반대급부로서 핵 및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동결,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 정례화, 대남 당국간 대화 및 특사교환을 통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시작, 비이념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간의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추진한다.

첫째, 북한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대북 농업개발지원 방안을 강구·추진한다.

이의 일환으로 우선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농업개발지원 방안으로 KEDO와 유사한 기구, 즉 남한,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농업개발기구」(KADO: 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Organization)의 결성을 추진한다. KADO를 통한 대북 농업개발지원은 ①KADO의 국제기구적 성격을 활용하여 북한의 남한정부 배제전략을 극복하고, ②회원국간 대북 지원비용 분담을 통해 우리측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③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과정에서 특정국가의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고, ④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이에 따른 북한의 정책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⑤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이미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농업지원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98년 5월 말 제네바에서 개최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회의에서 대북 농업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⁸⁷⁾

아울러 북한이 지리적·기술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작물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해 「남북 공동농업연구소」의 설립과 품종개발사업, 농업

87) Report for the Thematic Round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DPRK(<http://undp-dprk.apdip.net>).

기술지원, 남한의 전문가 파견 등을 추진한다.

둘째,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최근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EU 국가들과 두 차례의 정치회담을 열어 관계개선 문제를 논의했고 이탈리아와의 수교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75년에 관계를 단절한 호주와의 외무 당국자 회담 및 필리핀과의 수교협상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이 남한을 국제사회에서 소외·고립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관계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됨을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이들 기구의 대북 차관제공 및 북한 경제관료와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회복 노력을 돕는 한편,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대미·대일관계 개선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주변국에 의한 교차승인이 완료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미관계 진전은 북한의 안정과 대남도발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⁸⁸⁾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미국의 대북 조치가 조속히 실현되어 북·미관계가 개선될

88) 물론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 자체보다는 관계개선 과정에서 한·미 합동군사 훈련중지,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등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제시되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조치들이 취해질 경우, 이는 적어도 북한의 고립감과 불안감을 감소시켜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 있도록 대미 설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①미기업을 대북 직접투자 및 교역 허용, 미금융기관을 이용한 신용거래 및 대북 송금규모 확대,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해제 등의 대북 경제제재 추가완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시킴으로써 북한이 2~3년 전부터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 「PL 480」 지원이 실현되도록 한다. 미국은 1996년 3월 '여행경고국'(Travel Warning State) 및 '악당국가'(Rogue State)에서 북한을 제외했다.

③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안전보장 장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s)이 명시적으로 재확인되어야 한다.⁸⁹⁾ 1993년 6월 11일 북한 핵문제 협상의 제1단계 뉴욕회담 결과 북·미 양측은 상호간에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위협과 무력사용을 억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우리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우선 북·미관계 진전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탈냉전 이후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이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북·미관계 진전이 한반도의 안보 및 안정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이익이 됨을 미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정계, 학계, 재계 등이 거국적으로 미 공화당 의원은 물론 의회의 전문위원 및 보좌관들과 접촉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대미 의회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89) 김정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통일연구원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28.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미국정부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일관계는 일본 여야 7개당 16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의원단의 평양 방문(1999.12.1~3)으로 지난 1992년 이래 중단된 북·일 수교교섭이 연내 재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관계개선 전망이 밝아졌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과거처럼 북·일관계 개선을 견제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교교섭을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함은 물론 대북 포용정책의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남북경협안」을 작성·제시한다.⁹⁰⁾

① 화해·신뢰구축을 위한 사업: 대북 경수로 지원 지속, 남한 개별기업의 대북 직접 투자, 농업분야 협력, 노동력의 공동 이용 등

②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 북한의 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북한의 민간 소비영역(경공업, 유통업 등)에서의 경제협력 사업, 대북 물자기술 지원사업 등

③ 남북 산업간·지역간 연계성 확대 사업: 에너지분야 공동 개발, 철강·석탄공동체 형성관련 사업, 교통·통신망 연결, 관광개발, 황해안 대륙붕 개발 등

다섯째, 대북 포용정책의 상호주의원칙을 융통성있게 적용한다. 1998년 베이징 차관급회담은 상호주의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상

90) 박순성,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방안,” pp. 105-106.

호주의를 일부 수정하여 1999년 6월에는 북한에게 비료 10만톤을 먼저 제공함으로써 남북차관급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측이 비료 20만톤의 우선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회담이 또 다시 결렬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호주의원칙을 유지하되 상황 및 사안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비료제공에 대한 상호주의의 대가를 농업부문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북한의 경제상황과 군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이하에서는 기본합의서)의 내용 중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안을 먼저 추진한다. 예컨대 북한체제 인정, 북한 내부문제 불간섭, 대북 파괴·전복행위 중지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설립을 추진한다.⁹¹⁾ ①기존의 양자 동맹관계와 양립할 수 있다. ②설립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③협의체의 기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간다.

한편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방안의 일례로는 현재 민간차원 중심의 다자간 협의기구인 「동북아 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를 정부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⁹²⁾ NEACD와 관련, 북한은 1993년 7월의 준비회의 참석이후 본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국익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해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설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4년 9월 호주를

91)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 117.

92) 여인곤 외,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186 참조.

통해 「아세안 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참가를 타진한 바 있으며, 1996년 1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NEACD회의를 앞두고 간접적으로 참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미, 북·일수교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북한의 NEACD 참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 제2단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단계

제1단계 과제들의 추진으로 북한은 미·일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관계가 개선되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제도 얼마간 회복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도 초보적인 신뢰구축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북한은 조심성있게 대남대화에 나설 것이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목표로 설정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2년 2월에 발효된 기본합의서는 한반도에 하나의 민족에 두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한이 화해와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한 안내도(road map)이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은 곧 남북 화해·협력 나아가서는 평화정착 및 공존공영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본합의서에서 제시된 모든 분야의 방안들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업별 추진우선순위의 설정과 이에 따른 단계별 이행이 요구되는 바, 제2단계에서는 기본합의서의 諸방안 중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들을 중심으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⁹³⁾

현재 북한은 북·미관계 우선입장과 통미봉남 전략에 따라 기본합의

서 이행·실천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는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여 기본합의서 이행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제시한 조치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본합의서 이행과 관련하여 최고위급의 의지를 전달할 특사 교환을 적극 제의·추진한다.

둘째, 현재 가동되고 있는 4자회담, 북·미대화, 남북대화 등의 다양한 대화통로를 활용하되, 특히 현재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4자회담에서 미·중의 지원을 받아 기본합의서의 이행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세부실천 사항의 이행을 남북대화틀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4자공동선언」의 채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1단계에서의 북·미 및 북·일 관계개선을 토대로 북한과 미·일의 수교를 적극 지원하여 주변국에 의한 교차승인을 완료한다.

한편 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목표로 부문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⁹⁴⁾

(1) 화해부문

단기적으로 기본합의서의 「체제인정·존중」(1조), 「내부문제 불간섭」

93) 「남북 기본합의서」는 화해부문, 불가침부문, 교류·협력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간 교류·협력은 현 정부의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일정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하며, 남북간 정치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질 경우 교류·협력은 큰 무리없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화해부문과 불가침부문에 한정하여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94) 제시된 추진과제는 민족통일연구원이 이미 작성한 정책보고서들의 내용을 현실적 합리성 및 객관적 타당성 등에서 재검토하여 종합한 것이다.

(2조), 「비방·중상 금지」(3조), 「파괴·전복행위 중지」(4조) 등의 조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이므로 남북간 해석상의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본개념규정합의서」의 채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본개념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합의서상의 용어에 대한 개념 및 적용범위를 규정한 부속합의서를 마련하여 정치분과위원회에서 심의·채택하도록 한다.

특히 비방·중상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7·4 남북공동성명 직후 「상호비방중지조치」(1972.11.11)가 실패한 바 있듯이 비방·중상매체가 언론·방송, 뼈라·포스터 등을 포함한 출판물, 연구·영화 등 예술작품, 전화, 편지, 확성기 방송, 군중대회 등 광범위하므로 남북 언론매체간의 상이성 조정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비방·중상 금지는 양측 정부의 규제가 가능한 관영매체를 통한 비방·중상부터 금지한 후, 언론자유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영매체에 의한 비방·중상 금지의 순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⁵⁾

남북관계를 효율적으로 운영·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연락사무소의 본래기능 회복이 시급히 요구됨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해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를 요구·관철한다. 이와 함께 정치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하 자문기구로서 관계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치분과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본합의서의 이행단계 진입으로 각 협의기구들에 의한 남북간 협상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의 내부기구로서 「남북협의대책기구」를 구성함으로써 대북협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

95) 이와 관련, 북측은 정치분과위 1차회의에서 “관영, 민영을 막론하고 어떤 언론기관이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괄적 동시실천을 주장한 바 있다.

중기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대립과 경쟁을 지양하고 서로 협력(6조)하기 위하여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의 남북대표부간 협의체 구성과 남북공관간 협력창구 개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유엔은 남북한의 공동 활동무대로서 경제·문화협력을 비롯한 제반 국제교류·협력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므로 유엔 및 산하 국제기구에서의 외교적 대결·경쟁 중지와 효율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주유엔 남북 대사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락기능의 확대와 상대방체류 자기측 주민의 보호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의 교환 설치를 추진한다.

(2) 불가침부문

우선적으로 남북 당사자간 협의원칙에 기초하여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추진하며, 향후 군비축소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군사분과위원회 산하에 자문기구와 주제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는 전문가협의회 및 실무추진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군사분과위원회와 군사공동위원회의 활동을 확대·제도화시키도록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기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기초적 신뢰구축사업으로는 기초 군사정보 교환 및 군사훈련 통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초정보 교환으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의 상호 통보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군사훈련 통보는 보병부대의 경우 사단급 이상, 전차·포병·기계화 부대의 경우 여단급 이상, 유도탄부대의 경우 대대급 이상, 도하부대의 경우 연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수준 이상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45일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추진한다.

한편 남북간 분쟁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직접교섭방식을 원칙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부문별 분쟁을 협의·해결하도록 하되, 「각 분과위원회에서의 교섭 → 고위급회담에서의 교섭 →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간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간 사실심사와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제3자 개입을 명문화하는 남북간 조정·중재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중기적으로는 기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사업에 이어 다음과 같은 본격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남북 군인사들의 일정규모 이상의 군사훈련 참관, 군사령부 방문, 기념행사 참관 등을 통해 군인사교류를 실시한다. 둘째, 기초적인 군사정보 교환사업을 일정규모 이상의 부대편성 및 배치, 군병력 수, 주요 사령부 위치, 특정장비, 방위예산 규모와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교환 등으로 확대한다. 셋째,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근역에서 실시되는 위협적인 군사활동과 공세적 성격의 대규모 훈련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 기초적 신뢰구축사업에서 군사훈련 통제를 의무화한 수준에 해당하는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넷째, 군사훈련 통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에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규모 및 횟수 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 장비 및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와 실천을 추진한다. 여섯째,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공세전력배치 제한지대」(LDZ: Limited Deployment Zone)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안에 배치된 공격용 무기 및 병력을 후방지역으로 이동 배치한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미국과

의 긴밀한 협조하에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제3단계: 평화체제 전환단계

제2단계에서 추진하고 상정되는 남북관계가 수립되면 제3단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자연적으로 개선·발전되어 소요되는 시간의 장단만 있을 뿐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해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제2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제3단계의 목표는 앞 단계에서 추진된 과제들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단계에서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 남북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 확보 및 남북간 군비축소 실현 등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공고화를 목표로 설정한다.

우선 기본합의서체제의 본격적인 가동과 4자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간 평화상태를 구축하여야 한다. 평화협정의 내용에는 단순히 전쟁상태 종식만이 아니라 평화의 의지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남북 평화공존, 무력불행사 및 불가침, 경계선, 군비축소, 한반도 비핵화, 국제적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체결 조약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전통적인 평화협정과 달리 전쟁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 및 배상문제를 우회하고, 과거처리 문제보다는 남북간 평화공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북한이 한국의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자격을 완강히 거부하여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남북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한·중 평화협정의 동시 체결, 즉

교차 평화협정체결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⁹⁶⁾

다음으로는 남북 평화협정의 이행·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적 평화보장 방안으로는 ①미·일·중·러 주변4국이 보장하는 방안, ②미·중이 보장하는 방안, ③미국이 보장하는 방안, ④참전 16개국 및 중·러가 보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⁹⁷⁾ 그러나 ②안은 한·미 및 북·중관계를 고려할 때 타당성은 있지만, 일·러가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③안은 미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④안은 제네바정치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법적 근거는 있으나, 회의 개최상의 어려움 및 절차상 복잡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반도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①안(주변4국 보장방안)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구성이 실현될 경우에는 이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변4국과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에 의한 「2중 국제적 보장」장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조치들과 함께 실질적인 군비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pproach to arms control)⁹⁸⁾를 실현함으로써 남북한 양측의 전쟁도발 능력을 감소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양측은 다음과 같은 군비축소의 목표와 기본원칙에 대

96)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일평,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중국·미국의 역할,” 참조.

97) 국제적 평화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동진, 「국제적 평화보장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참조.

98) Darilek은 「군비통제」(arms control)를 CSCE와 같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마련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적 군비통제」(operational approach to arms control)와 MBFR과 같이 실질적인 군비감축을 겨냥한 「구조적 군비통제」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Richard E. Darilek, “The Future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A Tale of Two Cities: Stockholm, Vienna,” *Survival*, Jan/Feb. 1987.

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상호 군사력 증강계획의 축소 조정 및 동결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서 신무기의 도입·개발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

둘째, 기습공격 및 공세작전 능력을 가능케 하는 공격용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감축, 폐기한다.

셋째,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하지 않으며 보유중인 무기는 전면 폐기하도록 한다.

넷째, 동수 보유원칙에 의해 군사력을 감축한다.

다섯째, 상호간 감시 및 검증체도를 확립한다.

여섯째, 남북한간의 전력균형 상태를 고려하여 한·미 안보동맹관계의 성격변화와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조정을 군비축소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요컨대 제3단계에서는 남북 평화공존체제 수립과 남북연합(「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제2단계) 또는 연방(「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의 제2단계)의 진입을 위해 기본합의서의 전면 이행을 추진하나, 북한의 특별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구사는 필요없을 것이다. 이미 제3단계에서는 북한도 대미, 대일관계의 발전에 상당한 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고 대남관계에서도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북한이 능동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조치들을 먼저 제안하는 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VI. 결 론

냉전의 역사는 지역적 규모에서든 세계적 규모에서든 힘에 의해 우위를 확보하려는 정책은 일시적인 이득을 줄 뿐 장기적으로는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과 소련이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얻은 교훈이자 남북한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기도 하다.

서로가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 벌여온 수십년간의 대결이 하루아침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바뀔 수는 없다. 수십년 동안 각각은 자신의 처지가 열세라고 생각했고 상대방의 행위 이면의 이익과 이유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상호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고 종종 상대방 행위와 동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불신과 반목을 불러왔다.

21세기는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포기하여야 한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 남으려면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시대적 지상명령이다.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함에 있어 제일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한의 변화이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는 어렵다. 스스로 만든 기준과 필요에 의한 것이고 속도도 느리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다행히 북한도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서 외부세계로부터 끊임없이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속사정이 폐쇄주의를 고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금강산을 개방하거나 '자주권 수호'를 외치면서도 금창리 지하의혹시설에 대한 방문, 미사일개발 등의 민감한 군사적 문제

를 경제적 보상과 맞교환하려는 북한의 자세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외부와의 접촉이 잦아지면 동요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체제를 가진 북한으로서는 개혁·개방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개방이라는 역사적 대세를 북한도 거스를 수 없음은 자신들이 외치는 ‘주체’와 ‘사상교양의 강화’가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처지를 고려할 때 막다른 궁지로 내몰기보다는 북한이 안심하고 개방과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 여건조성에 있어 미·일의 대북관계 정상화는 필수적이다. 탈냉전시대이건만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미·일을 비롯한 타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자의든 타의든 북한이 동북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고, 그래서 안보상 커다란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역내 국가들의 압력에 대해 북한이 “자위적 조치로서 내정간섭”⁹⁹⁾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불안을 완화시켜 주고 북한이 스스로 동북아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이다. 이를 통해 화해와 다방면·다차원의 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기본합의서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공존을 인정하고 통일로 나아간다고 ‘합의한’ 문서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천이 용이하고 남북한이 상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야부터 기본합의서의 내용이 지켜지

99) 「조선중앙통신」, 1999.3.12, 8.18.

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서 특히 요청되는 것은 국제공조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주변국의 호응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다자적이든 쌍무적이든 주변 4강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주변 4강 모두가 희망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력체제의 구축 전망은 밝다.

4강과의 협력 가운데에서도 한·미·일간의 긴밀한 협력은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대북문제에서 한·미·일은 많은 부분 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대북정책의 기초에서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세세한 부분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자체나 그것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라는 거시적 해법은 한반도 위기 관리가 중대한 국익인 우리 입장으로는 적절하지만, 핵 및 미사일 문제 등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현안의 처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일에게는 “너무 길고, 너무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방법”일 수 있다.¹⁰⁰⁾ 당장의 결과에 민감한 국내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미·일 정부로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보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 등 닥친 현안들의 해결이 우선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일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우리의 기본 구상이나 전체적인 틀을 지지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구체적인 생각에까지 적극적으로 동조해 줄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특히 미·일로서는 대북협상에서 단계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인 관계개선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불만일 수 있다. 그러므로 미·일에게 포괄적 방식으로 또한 일괄타결의 한 항목으로 대북

100) 김달중,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5대 과제,” p. 8.

관계를 개선하라는 촉구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조심성있게 전개되어야 하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에서의 미·일의 역할이 양국의 국익을 증진시킨다는 설득력을 더욱 갖추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성학. 「카멜레온과 시지프스」. 서울: 나남출판, 1995.
- 공보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서울: 공보처, 1996.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역. 「신미국 안보론(하)」.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2.
-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민족통일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1997.
- 민족통일연구원편.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1995.
- 여인곤 외.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전동진. 「국제적 평화보장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전성훈. 「군비통제 검증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통일원. 「통일교육 기본방향」. 서울: 통일원, 1995.
-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1999.
- Buzan, Barry, Charles Jones and Richard Little. *The Logic of*

- Anarchy: Neorealism to Structural Re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Cantori, Louis J. and Steven L. Spiegel.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Regions: A Comparative Approach*.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0.
- Dolan, Anthony R. *Undoing the Evil Empire: How Reagan Won the Cold War*. Washington, 1990.
- Feis, Herbert. *From Trust to Terror: The Onset of the Cold War, 1945-50*. New York: Norton, 1970.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 Gaddis, John Lewis. *Strategies of Contai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Gardner, Lloyd C. *Architects of Illusion: Men and Ideas in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49*. Chicago: Quadrangle, 1970.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Glynn, Patrick. *Closing Pandora's Box: Arms Control and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1992.
- Gorbachev, Mikhail. *Memoirs*. London: Doubleday, 1996.
- Gurr, Ted.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Herf, Jeffrey. *War by Other Means: Soviet Power, West German Resistance, and the Battle of the Euromissiles*. New York, 1991.

- Herring, George C. *Aid to Russia 1941-46*.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3.
- Hertz, John H. *Political Realism and Political Ide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 Hertz, John H.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Atomic A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 Hoffmann, Stanley. *Gulliver's Troubles, or the Sett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McGraw-Hill, 1968.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Jervis, Robert.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 Kennedy, Paul.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Random House, 1987.
- Kolko,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 New York: Harper, 1972.
- Lafeber, Walter. *America, Russia, and the Cold War 1945-1980*. 4th ed. New York: Wiley, 1980.
- Levy, J. S. *War in the Modern Great Power System, 1945-1975*.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3.
- Luard, Evan. *War in International Society*. London: I. B. Taurus, 1983.
- McGwire, Michael. *Perestroika and Soviet National Security Policy*. Washington, 1991.

- Nye, Joseph S.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3.
- Quandt, William. *Decade of Decisions: American Policy Toward the Arab-Israeli Conflic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 Smith, Gaddis. *American Diplomac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1941-1945*. New York: Wiley, 1965.
- Ullam, Adam B. *Dangerous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2. 논문

- 길정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통일연구원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김계동.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국제적 탈냉전의 유형과 선택적 대안.” 한국전쟁연구회·한국언론재단 주최, 『한국전쟁의 회고와 과제: 새 천년의 의미』, 1999. 6. 25. 발표논문
- 김달중.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5대 과제.” 『통일경제』. 1999년 6월호.
- 김일평.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중국·미국의 역할.” 통일연구원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미국 국익위원회. “미국의 국익.” 「국가전략」, 제3권 제2호 (1997년 가을/겨울).
- 박순성.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방안.”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박종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미국·남북한의 3각구도와 한국의 정책대안.” 통일연구원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Ⅲ)」,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백중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방안.”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21세기 한반도 평화공존과 평화체제 구축」 발표논문, 1999.5.26.
-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연구.”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이종석. “대북 포용정책의 평가와 전망.”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1999년 추계학술세미나, 「‘국민의 정부’에 대한 중간국정 평가」 발표논문, 1999.9.17.
- 조기숙. “북한체제 변동 전망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모델.” 통일원편, 「북한·통일연구 논문집(Ⅲ)」, 서울: 통일원, 1993.
- 최종철. “교차승인 완성후 한국의 안보정책.” 「국방논집」, 제32호 (1995년 겨울).
- 하영선. “탈근대 국제정치이론.” 이상우, 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1992.
- 허문영.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시론).” 통일연구원 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Ⅰ)」,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Ayoob, Mohammed. “India as a Regional Hegemon: External

- Opportunities and Internal Constraints." *International Journal*, Vol. 46 (1991).
- Brzezinski, Zbigniew. "Ending the Cold War."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1989).
- Cossa, Ralph A. "Peace on the Peninsula: How to Get There From Here." A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n "Future Strategic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For Secur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held by New Asia Research Institute, Okazaki Institute and Pacific Forum CSIS at Sheraton Walker Hill, Seoul, Korea, April 22-23, 1999.
- Darilek, Richard E. "The Future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A Tale of Two Cities: Stockholm, Vienna." *Survival* (January/February 1987).
- Davis, James C.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XXVII (February 1962).
- Deudney, Daniel and G. John Ikenberry. "Soviet Reform and the End of the Cold War: Explaining Large-Scale Historical Chang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7, No. 3 (1991).
- Doran, Charles.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old War and the Gulf."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18 (1991).
- Evangelista, Matthew. "Sources of Moderation in Soviet Security Policy." Philip Tetlock, et al., *Behaviour, Society and Nuclear War*. New York. 1991.

- Everts, Philip P. "The Events in Eastern Europe and the Crisis in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ierre Allan and Kjell Goldmann, eds., *The End of the Cold War*.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No. 16 (Summer 1989).
- Gaddis, John Lewis. "The Cold War, the Long Peace, and the Future." *paper presented at the 90th anniversary Nobel Jubilee Symposium*, Oslo, 6-8 December 1991.
- Gaddis, John Lewis. *The Long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Gaddis, John Lewis. "The Long Peace: Elements of Stability in the Postwar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4 (Spring 1986).
- George, Alexander L.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Alexander L. George,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and Less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Goldmann, Kjell. "Bargaining, Power, Domestic Politics, and Security Dilemmas: Soviet 'New Thinking' as Evidence." Pierre Allan and Kjell Goldmann, eds., *The End of the Cold War*.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 Grunberg, Isabelle and Thomas Risse-Kappen. "A Time Reckon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Pierre Allan and Kjell Goldmann,

- eds., *The End of the Cold War*.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 Halliday, Fred. "The End of the Cold War." *New Left Review*, 180 (1990).
- Herz, John H.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2 (1950).
- Huntington, Samuel P. "No Exit: The Errors of Endism." *The National Interest*, No. 17 (Fall 1989).
- Kahler, Miles. "Institution-Building in the Pacific."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 eds., *Pacific Cooperation: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London: Allen & Unwin, 1994.
- Kahler, Miles. "Institution-Building in the Pacific." Andrew Mack and Johnson Ravenhill, eds., *Pacific Cooperation: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London: Allen & Unwin, 1994.
- Larson, Deborah W. "Crisis Prevention and the Austrian State Trea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1 (Winter 1987).
- Lebow, Richard Ned. "The long pea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failure of re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8, No. 2 (1994).
- Lindskold, Svenn. "Trust Development, the GRIT Proposal and the Effect of Conciliatory Acts on Conflict and Cooperation." *Psychological Bullentin*, Vol. 85, No. 4 (July 1978).

- Mearsheimer, John J.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1990).
- Nye, Joseph S.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 (Summer 1987).
- Osgood, Charles. *Alternatives to War or Surrender*.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 Osgood, Charles. "Suggestions for winning the real war with communis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December 1959).
- Rozman, Gilbert. "A Regional Approach to Northeast Asia." *Orbis* (Winter 1995).
- Scalapino, Robert A. "Introduction," Robert Scalapino, Seizaburo Sato, Jusuf Wanandi, and Sung-joo Han, eds., *Asian Security Issues: Regional and Global*.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Schlesinger, Arthur M. "The Origins of the Cold War." *Foreign Affairs* (October 1967).
- Shearman, Peter. "Gorbachev and the End of the Cold War." *Millennium*, Vol. 26, No. 1 (1997).
- Shirk, Susan L. "Asia-Pacific Regional Security: Balance of Power or Concert of Powers?" David A. Lake and Patrick M. Morgan, eds., *Regional Orders: Building Security in a New World*.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 Shustov, Vladimir V. "A View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and Some Lessons Thereof." *paper presented at the 90th anniversary Nobel Jubilee Symposium*, Oslo, 6-8 December 1991.
- Stein, Arthur A. and Steven E. Lobell. "Geostructuralism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e End of Cold War and the Reg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David A. Lake and Patrick M. Morgan, eds., *Regional Orders: Building Security in a New World*.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 Wendt, Alexander E.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 (Summer 1987).
- Østerud, Øyvind. "Intersystemic Rivalry and International Order: Understanding the End of the Cold War." Pierre Allan and Kjell Goldmann, eds., *The End of the Cold War*.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3. 기타

「조선말사전」. 서울: 동광출판사, 1990.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朝日新聞」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주최 제40회 학술회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과 남·북한 관계전망:『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 Second Look," July 27, 1999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8, No. 2 (1994).

Report for the Thematic Round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DPRK(<http://undp-dprk.apdip.net>).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1990.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육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계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독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낼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99-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	최수영	저	5,000원
99-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저	5,000원

99-12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김병로	저	7,000원
99-1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저	4,500원
99-14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국신	저	4,000원
99-15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재진	저	5,000원
99-16	전환기의 대북정책: 포용과 억지의 병행전략	홍관희	저	4,000원
99-17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박영호·박종철	공저	7,000원
99-18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조민	저	7,000원
99-1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와 추진 방안	박영규·이교덕	공저	5,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7,000원
Regime Sustainability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6,500원
and Proposals

■ 기타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舍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ku.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 이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와 추진방안

인쇄/1999년 12월 28일

발행/1999년 12월 31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북한정치군사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5 팩시밀리 901-2542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ISBN 89-87509-97-4

5,500원